주간 통일정세

2016-06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Ⅰ.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
2. 대내 정치
3. 경제
4. 사회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Ⅲ.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국군포로
6.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KINU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16-06(2016.02.01~2016.02.1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우) 137-756
전화 (02) 2023-8000 전송 (02) 2023-8209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Ⅰ.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이 막후조종" 주장(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한국과 일본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미국이 동맹강화를 목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막후조종해 만들어낸 음모의 산물"이라고 보도함.
- 통신은 '고발장' 형식의 기사를 통해 "미국은 일본과 남조선의 집권자들을 회유, 강박하여 (위안부 관련) 협상탁에 마주앉게 만들었다"면서 "미국은 합의 도출을 위한 일본·남조선 협상에도 깊숙이 개입하였다"고 전함.
- 고발장은 또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두 주구들(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침략적인 대 아시아 지배 전략 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백악관의 각본과 연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함.

■ 北 매체, '수소탄' 폭발력 논란에 "임의 조절통제 가능" 주장(2/1, 조선의오늘)

- '조선의 오늘'은 '수소탄' 핵실험의 폭발력이 작았다는 점을 이유로 '실패'로 규정한 외부의 평가에 대해 1일 "핵폭발 능력을 임의로 조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함.
- 정일철 '남조선문제연구사'는 1일 매체의 기자와 나눈 대담에서 "수소탄이 폭발하면 몇십 Mt(TNT 화약 백만 t에 해당)의 폭발력이 발생하는데 조선에서 시험한 수소탄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인 몇 kt의 폭발력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실패의 근거라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이어 그는 "만약 우리 령토(영토)가 미국이나 기타 나라들처럼 땅덩어리가 넓다면 얼마든지 지금껏 핵 대국들이 실시해온 수소탄 시험보다 몇십, 몇백 배나 위력한 수소탄을 터뜨릴 수 있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 "북러 친선 강화…美 적대시정책 파탄날 것"(2/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조로(러)의 경제협조'라는 기사에서 "조선이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한 것을 계기로 미국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조선은 공동의 이익에 기초한 이웃나라들과 우호 협조관계가 확고하다"고 밝힘.
- 또한 "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미국에 차례질(돌아갈) 것은 실망과 파탄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조로 친선의 해'였던 지난해 두 나라 사이 인사 왕래가 빈번했고 많은 행사도 있어 전통적인 우호친선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며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을 부각시킴.

■ 북한 "한반도서 북미 두 핵보유국 대결 첨예"(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미국은 시급히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런 정세가 조성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 지배층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면서, 4차 핵실험 이후 '핵 보유국'임을 강조해온 북한이 3일 "한반도에서 북미 두 핵보유국 사이에 첨예한 대결구도가 형성됐다"고 주장함.
- 이어 "현 사태는 미국에 결코 유리하지 못하다"면서 "이를 타개하는 길은 미국이 시급히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여러 언론들은 조선(북한)이 지난해 1월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중지하는 경우 자국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중지하는 용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을 놓고 볼 때 조선과 미국 사이에 대화를 통한 합의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사드 배치, 남조선 침략기지 만들려는 미국의 전략"(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세계 패권을 노린 노골적인 기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에 대한 사드 배비(배치)는 명백히 남조선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패권을 틀어쥐고 절대적 우세로 지역 대국들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의 산물"이라고 보도함.
- 논평은 "(사드 배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포위환을 바싹 조여 저들의 피해는 극력 줄이면서도 상대측에 대한 타격효과를 최대로 높이자는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사드가 남조선에 배비되는 경우 그 구성요소인 레이더의 탐지범위 안에 우리 주변나라들의 주요군사기지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주변나라들이 사드의 실지목표는 자국이라고 하면서 그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고 주장함.

■ 北 "미국·남한이 전쟁위기 조장…제2 '8월사태' 예고" 위협(2/5,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5일 '제2의 8월 사태를 몰아오는 북침전쟁광기'라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연초부터 '북도발'을 전례없이 떠들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북침을 선동하는 호전적 폭언들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함.
- 민주조선은 이어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제2, 제3의 8월사태로 기어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 도발자들을 사정없이 징벌하는 정의의 조국통일 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힘.

■ 조선신보 "위성 계속 날아오르는 것 보게 될 것"(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광명성 4호 성과적 발사, 경제강국 건설의 힘찬 추동력' 기사에서 "세계는 앞으로도 광명성 계열의 위성들을 조선 노동당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 2012년 시작한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이며 "이번 성과를 토대해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고 전한 뒤 동창리 발사장 관계자의 "유인 우주 비행선까지 쏘아 올리게 될 것"이라고 한 발언도 소개함.
- 조선신보는 "광명성 4호의 성과적 발사는 조선의 종합적 국력에 대한 증명"이라면서 동창리 발사장은 최대 400t까지의 미사일을 쏴 올릴 수 있으며 10t 정도의 물자를 우주 공간에 운반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함.

다. 회담 관련

■ 北수주-수개월내 플루토늄 추출시작 가능, 이동식ICBM 배치단계(2/10, 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의 핵단지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플루토늄 추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3차 핵실험 후인 2013년에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흑연감속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5MW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핵시설의 재정비·재가동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실제 영변의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힘.
- 그는 특히 “북한은 충분히 오랫동안 원자로를 가동해 왔으므로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그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함.

■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 “북한, 핵무기 최대 20기 보유”(2/10, 교도통신)

- 9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10~20기의 우라늄, 플루토늄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함.
- 이는 약 1년 전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이 최대 16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 데 비해 늘어난 수치로 교도통신은 파인스타인 위원장의 발언이 미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수집한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北, 영변핵시설 부근에 서울 본뜬 군사훈련시설”(2/1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핵시설이 자리한 평안북도 영변 부근에 서울의 특정 지역을 본떠 만든 가상 훈련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 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12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해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영변군 구산리에 대규모 군사훈련 시설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멜빈 연구원은 이들 3개 구역 중 여러 채의 건물이 위치한 가상 훈련장이 서울의 일부 지역을 본떠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군사행동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함.

■ 北, 이동식 ICBM 부대 ‘KN-08 여단’ 창설…실전배치 단계(2/14, 연합뉴스)

- 북한군이 최근 미사일부대를 총괄지휘하는 전략군 예하에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대인 ‘KN-08 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KN-08이 사실상 실전배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합뉴스는 14일 보도함.

- 뉴스는 2012년 4월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한 군사 퍼레이드에서 중국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KN-08을 처음 공개한 지 4년여 만에 여단 편성과 함께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전함.
- 또한 KN-08 여단이 정식 편성됨에 따라 북한의 전략군은 'KN-08·무수단·노동·스커드여단' 등 4개 전략 및 전술 미사일여단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뉴스는 설명함.

라. 대미국

■ 北매체 "핵무력 상대는 미국" 내부 발언 소개(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리정철 북한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실장이 3일 본 매체 기자에게 "조선의 혁명무력은 남조선군 같은 것들을 상대로 보지 않으며 우리의 강위력한 핵무력은 철두철미 미제의 핵전쟁 소동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이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이어 "현재의 상용무력만으로도 남조선군과 남조선 강점 미체침략군을 단숨에 괴멸시킬 수 있는 우리 인민군대가 무엇 때문에 동족의 머리 위에 핵폭탄을 퍼붓겠는가"라고 덧붙임.
- 또한 리호 김일성종합대 부교수도 "현 미국 행정부가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해놓은 것은 미국의 머리위에 떨어질 거대한 철추의 무게를 몇배로 불쿠어(불려)놓은 것"이라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전략적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마. 대중국

■ 북한 주재 中대사, 설 연회 마련…"당대회 성과적 개최 축원"(2/2, 조선중앙통신)

- 리진쥔(李進軍) 주북한 중국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2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연회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강하국 보건상 겸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초대됐다고 밝힘.
- 리 대사는 연설에서 "지난해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이하는 기쁨을 안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으며, "올해 조선에서 역사적인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다"며 "당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고 김정은 제1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노동당의 영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사업에서 보다 새롭고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우다웨이와 북중관계·지역정세 의견교환"(2/4, 조선중앙통신)

-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박3일 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4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무대위(우다웨이) 중국 정부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와 일행이 4일 귀국했다"며 "방문 기간 무대위 특별대표와 일행은 리수용 외무상을 의례 방문하고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고 전함.
- 이어 "담화와 회담에서는 조중(북중) 쌍무관계와 지역정세를 포함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전함.

■ 中외교부장 "중국, 북한에 긴장고조 반대입장 전달"(2/5, 봉황위성TV)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중국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최근 방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봉황위성TV는 5일 보도함.
- 영국을 방문 중인 왕 부장은 전날 이 TV와 한 인터뷰에서 우 대표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우리는 6자회담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조선(북한)을 방문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왕 부장은 특히 "(우 대표 방북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는 당연히 조선을 향해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었다"며 그것은 바로 "우리(중국)는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고 보도함.

바. 대일본

■ 요미우리 "北, 재일조선학교 교원 통해 옛 통진당 간부에 지시"(2/2,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 교원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이상 한국에 대한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보도함.

- 신문은 일본 도쿄도(東京都) 고다이라(小平)시에 있는 조선총련 계열 교육기관인 조선대학교 전직 교원(이하 전직 교원)의 자택을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압수수색해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225국 발신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고 보도함.
-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공안부는 작년 6월 10일 실업급여 관련 사기 혐의로 전직 교원의 집을 수색하고 컴퓨터를 압수했으며, 컴퓨터 분석 결과 225국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이나 지시문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명령으로 2014년 해산한 통합진보당 전직 간부(이하 전직 간부)가 보낸 활동 보고서, 전직 간부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함.

■ 조선총련 교토본부 건물 경매…미사일 후폭풍 속 북한 압박(2/9, 교토신문)

- 9일 교토신문에 따르면 조선총련의 교토부(京都府)본부가 입주한 교토시 소재 '교토조선회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앞서 경매 개시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채권자는 조선총련 교토부본부에 대해 약 4억5천만 엔(약 46억930만원)의 채권을 지닌 교토시의 한 부동산 회사임.
- 이 토지와 건물은 고정자산세 등을 체납한 것 때문에 2012년 11월에 이미 교토시가 압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매 개시 결정은 작년 11월 20일 교토지방재판소가 내린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이뤄진 것임.
- 그럼에도, 지난달 제4차 핵실험과 최근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박 소재로 여겨질 전망임.

■ 조선총련, 일본 대북 독자제재에 "재일조선인 인권침해"(2/10, 교도통신)

- 일본 정부가 10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라 대북 추가 제재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측은 "재일조선인의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가나가와(神奈川)현 조선총련 관계자인 40대 남자는 교도통신에 "피로 연결된 가족과 친족이 북한에 있는 직원이 많다"며 "재입국 금지는 조국에 가지 말라는 것으로, 일본의 포로가 된 것 같다"고 말함.

사. 대러시아

■ 北 김정은, 각국 지도자에 연하장…中보다 러시아 먼저 호명(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6년 새해를 맞아 세계 각국 지도자에게 연하장을 보낸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에 이어 다시 러시아를 중국보다 먼저 호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친선국 당 및 국가 수반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전하면서, 각 국가수반의 실명 없이 직책만 나열했으며 '러시아연방 대통령',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등 순으로 보도함.

■ 러·북, 불법 체류자 송환 협정 체결…탈북자 강제 송환 위험(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러시아와 북한이 2일(현지시간)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 이 협정 이행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이민국 공보실이 밝혔다고 보도함.
- 공보실은 연방이민국 부국장 니콜라이 스모로딘과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해당 문서에 서명했다면서 협정이 러시아와 북한에 머무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 러시아와 북한이 서명한 협정은 지난 2014년부터 양국이 준비해온 것으로 '불법 월경이 의심되는 사람이 합당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체류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뉴스는 설명함.

아. 국제기구

■ 北, 외교사절들 과학기술전당 견학시켜…'위성' 주장 의도인듯(2/4, 교도통신)

- 북한이 3일 각국 외교사절들에게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을 견학시켰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함.
-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관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오는 16일인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앞두고 과학기술전당을 찾았다고 교도는 전함.

- 3일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인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다음 날인 것을 고려했을 때, 외교사절에게 자국 과학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발사물이 '위성'이라는 주장을 부각시키려는 의중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스키장에 오스트리아 케이블카 수출"…대북제재 허점 노출(2/5, 뉴욕타임스, 연합뉴스)

- 뉴욕타임스(NYT)는 5일 오스트리아 중고 스키설비 업체 프로알핀사가 유럽 스키장에서 쓰던 중고 케이블카를 사들여 중국 업체에 판매했으며, 이 업체가 케이블카를 다시 북한으로 실어 보냈다고 오스트리아 케이블카 건설업체 도펠마이어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뉴욕타임스는 해당 케이블카가 도펠마이어사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지 최소 30년이 지났으며, 오스트리아 이슈글 스키장에서 사용하던 것이라고 설명함.
-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보석, 고급 자동차, 요트 등 사치품을 대북 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에서 스키는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로 스키 설비는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 유엔보고서 "북한, 중국산 드론 수입해 군사적 사용 우려"(2/6, 교도통신)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는 중국산 무인기(드론)가 북한에 의해 군사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드론의 대북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는 북한군 정찰총국이 운용하는 드론이 중국 베이징(北京)에 본사를 둔 업체인 '마이크로플라이'의 무인기 'UV10'과 비슷하다고 밝혔으며 마이크로플라이에서 중국 내 기업을 위해 출하한 제품이 중개자를 거쳐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함.
- 보고서는 북한군에 의해 정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무인기를 탄도미사일 관련품으로 규정해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북한제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조만간 안보리에 제출할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일제의 '일본군 성노예제도'는 "극악한 조선민족 말살, 침략정책의 산물,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2.1, 평양방송)
- 미국의 '남한내 핵무기 반입 선포('58.1.29) 58년' 관련 "미국은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이 땅에 핵전쟁 구름을 몰아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2.1, 평양방송)
- 北「청년동맹」대표단(단장: 정영원 중앙委 부위원장), 2월 1일 러시아 방문(세계민주청년연맹 총이사회 참석) 위해 평양 출발(2.1,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애리조나 주에서의 중국인 유학생 총기사망 사건을 거론 '총기류범죄를 근절시킬 방책이 없는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인권옹호자로 행세하며 문명과 인권에 대해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조소(2.2,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日 기시다 외무상, 국회 외교연설(1.22)에서 "독도 일본땅" 주장 관련 '위안부문제 협상 때 써먹은 수법을 독도 강탈책동에 재현해 보려한다'며 '영토강탈에 환장이 된 자들이 독도를 어째보려고 날뛰어도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경고(2.2, 중앙통신·민주조선)
- 우다웨이(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일행, 2월 3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2.3, 중앙통신·중앙방송)
- 韓·日 위안부 합의 관련 日 당국자들의 발언(위안부 문제 법적으로 최종해결, 더 이상 과거청산 책임지지 않을 것)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포함한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 인정, 철저한 배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2.3,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외무성, 2월 4일 '2016년 설 명절' 즈음 주북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을 위한 친선모임 마련 및 궁석웅(부상) 등 참석과 주북 러시아 대사(마체고라) 등 초대(2.4, 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2.16)' 경축 북한 우표 전시회(北-中 친선 반영 우표 320여종 등), 2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2.4, 중앙통신)
- 「총련」본부 위원장 회의, 1월 29일 도쿄 조선회관에서 진행(허종만 의장 보고) 및 '김정은의 신년사 과업 관철 및 노동당 제7차 대회 사업성과' 결의(2.4, 중앙방송·중앙통신)
- 美 국방부가 공개한 '서울 핵폭탄 폭발' 시뮬레이션 영상 관련 '우리(北)가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은 민족의 머리 우에 핵탄을 들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전쟁기도를 분쇄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위적 조치임을 지속 주장(2.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 외무성, 2월 5일 설명절 즈음 駐北 中 대사관 성원들과 친선모임 진행(2.6, 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 경축 '조선우표전시회'(320여종), 2.2~3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2.5, 중앙방송)일본 당국자들의 발언(군 위안부는 직업적인 매춘부였음, 독도는 일본 땅 등) 관련 '간특하기 그지없는 일본 반동들만이 할 수 있는 너절한 추태'라며 '일본은 역사 앞에 정직해야 하며 인간 앞에 성실해야 한다'고 비난(2.6, 중앙통신·노동신문)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 총비서(웬 푸 쫑), 1월 30일 김정은 축전(1.27, 재선 관련)에 대한 답전(2.6, 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표단(단장 : 박명국 부상), 2월 6일 러시아 방문 후 귀환(2.6, 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2.16)에 즈음한「직맹」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2월 3일부터 8일까지 진행(2.8, 중앙통신)
- 러시아 타스통신·중국 신화통신·미국 AP통신·영국 로이터통신·일본 교도통신 등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들이 2월 7일광명성-4호의 “완전성공” 소식 긴급보도(2.7, 중앙통신)
- 주한 美 대사관 홈페이지에 ‘독도 빠진 한국지도’ 게시 관련 ‘미국의 속심은 일본의 영토 강탈 책동에 푸른등을 켜주자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본과 손을 맞잡고 조선침략을 공모하여온 조선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라고 비난(2.8,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정은 黨 제1비서, 2월 9일 시리아 대통령에게 모친 사망(2.6, 86세) 관련 조전(2.9, 중앙통신)
- 동유럽 등 일부 국가들의 ‘외세의존 난관극복과 경제발전·번영시도’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자강력이야말로 백승의 무기이며 승리의 원천”이라고 ‘反帝 자주 및 자강력제일주의’ 강조(2.10,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일 생일’ 경축 조일우호모임, 2월 9일 일본 도쿄에서 남승우(「총련」 부의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2.11, 중앙방송)
- 北「특별조사委」 담화(2.12), 일본 정부의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독자적 對北 제재 결정(2.10)에 대해 ‘일본인 납치문제 조사활동 전면 중지와 특별조사위원회 해체, 강력한 대응 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2.12, 중앙통신·중앙방송)
- 現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전수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조미 적대관계청산”이라며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 종료 및 한반도 평화보장체계 수립’ 촉구(2.12, 중앙통신)
-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연행 부정(군 및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 확인되지 않았다)’은 “과거 패망에 대한 지독한 앙심과 재침의 뼈저린 갈망”이라고 비난 및 ‘사죄와 배상’ 촉구(2.12, 중앙통신·노동신문)
- 駐韓 美 대사관의 ‘독도 삭제, 동해→일본해 표기 지도 홈페이지 게재와 사용’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일본해 주장을 비호하기 위한 계획적인 술책”으로 “조선민족 자주권에 대한 유린이며 범죄행위”라고 비난(2.12,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노동당 대표단(단장 : 김영철 黨 비서), 2월 12일 라오스 주석(추말리 사야손) 면담 등 라오스 방문소식 보도(2.12, 중앙통신)
-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 2월 11일 김정은에게 ‘김정일 생일 74주년’ 축전(2.12, 중앙통신)
- ‘제24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참가 러시아·라트비아·벨라루스·캐나다 선수들, 2월 13일 평양 도착(2.13, 중앙통신·중앙방송)
- 스페인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대표단’(단장 :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 위원장), 2월 13일 평양 도착(2.13, 중앙통신·중앙방송)
-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 2월 11일 김정은 조전(시리아 대통령 모친 사망 관련)에 대한 답전(2.13, 중앙통신)
- ‘지난 수십 년간 적대세력의 갖은 제재와 봉쇄 속에서 살아온 우리(北)에게 제재와 압력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며 ‘美행정부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매여달릴 것이 아니라 대세의 흐름과 정세발전을 올바로 보아야 하며 온전한 안목을 가지고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2.13, 중앙통신)
- ‘우리(北)가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北-美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종식되면 한반도에는 평화가 깃들고 미국이 우려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2.13, 중앙통신·노동신문)

- 리수용(외무상), 2월 11일 크로아티아 신임 외무상에게 축전(2.13, 중앙통신)
-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2월 12일 '北 미사일 발사' 관련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일본 도쿄에서 진행(2.13, 중앙통신)
- 미국의 '北 핵위협' 발언들 관련 "황당한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위협에 대하여 말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며 '해결방도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종식에 있다'고 강조(2.14, 중앙통신·민주조선)
- 재일조선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2월의 축복 넘친 내 조국의 밝은 미래), 2월 14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2.14, 중앙통신)
-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대표단(단장: 정영원 청년동맹 부위원장), 2월 14일 세계민주청년연맹 총이사회 회의(러시아) 참가 후 귀환(2.14, 중앙통신·중앙방송)

2.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인민군, 오직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가야"(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노동당 인민군위원회의 연합회의·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군(軍)을 향한 절대복종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지난 2~3일 평양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명령 일하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세워야 한다"며 "인민 군대는 오직 최고사령관(김정은)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세기를 이어온 반미전면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어 "전당, 전군이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남포항서 김정은 사용 추정 호화 요트 포착"(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호화 요트 한 척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북한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4일

방송에 출연, 지난해 10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남포항에서 길이 약 50m의 호화 요트가 발견됐다”고 밝힘.

- 멜빈 연구원은 “요트가 새 것이라면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요트를 소유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요트 구매와 관련해 누가 유엔 제재를 피해 구매할 수 있었는지,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했는지 등도 의문”이라고 지적함.

■ 北김정은 전용기 타고 미사일 발사장行…군수라인 총출동(2/11,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전에 진행한 동창리 발사장 현지 시찰에 노동당 군수공업부 주요 인물들이 대거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TV는 11일 오전 김 제1위원장이 군수 라인 인물들과 함께 미사일 발사장을 점검하는 모습을 담은 새 기록영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성과적으로 발사'를 내보냄.
- 이번 시찰에는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박도춘 전 군수 담당 비서, 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북한의 군수 담당 핵심 인물들이 수행했으며 이들 군수공업 라인 외에도 이번 발사장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근 권력 서열이 급부상한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도 김 제1위원장을 수행함.

■ “北 김정은, 작년 ‘핵·미사일 도발’ 제재 대비 지시”(2/12, 자유아시아방송)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1~2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두고 이미 작년에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지난 설을 앞두고 중국에 나온 평양 소식통은 RFA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작년에 북한 군부에 향후 3년 치 군량미를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을 지시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점검해 왔다”고 밝힘.
- 그는 “대다수 주민은 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지시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간부들이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김정은이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리영호, 2012년에 '위성=공격용 무기' 자인 발언(2/4, 연합뉴스)

- 리영호 전 북한군 총참모장이 숙청되기 직전인 지난 2012년 초 '장거리로켓에 핵무기를 탑재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연합뉴스는 4일 보도함.
- 4일 KBS와 정보 당국자에 따르면 2012년 초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리영호 당시 인민군 총참모장은 평양에서 열린 간부강연회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게 로켓 무기나 같아. 그 로켓에다가 핵무기 설치하면 미국 본토까지 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뱃심이 든든하다"고 주장했다고 뉴스는 전함.
- 이어 "우리는 핵무기도 가졌다. 미국 놈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를 인정하든 안 하든 핵보유국"이라고 리영호 총참모장의 발언 등이 음성파일로 녹음됐기 때문에 리영호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지만 다수의 대북 전문가들은 리영호의 육성이 맞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함.

■ 北 김영철, 인민복 차림 등장…'통전부장 임명' 확인(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주재로 지난 2~3일 평양에서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노동당 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확대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주석단의 좌석배치 사진을 공개했음.
- 사진을 보면 김 제1위원장 오른쪽 첫 번째 자리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두 번째 자리에는 최태복 노동당 비서, 왼쪽 첫 번째 자리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 두 번째 자리에는 김영철이 각각 앉아 있으며 북한 권력서열 2위인 황병서는 차수 군복을 차림인데 비해 김영철은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있음.
- 이를 고려했을 때, 김영철이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뒤를 이어 통전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리영길 북한 총참모장, 비리혐의로 이달 초 전격 처형"(2/10, 연합뉴스)

- 북한의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이달 초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전격 처형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리 총참모장은 지난 2~3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관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군당(軍黨)위원회 연합회의 전후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처형됐다고 함.
- 리 총참모장은 2012년 중부 전선을 관할하는 5군단장에 기용됐고, 2013년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거쳐 같은 해 우리 군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에 발탁된 인물로 총참모장 기용 이후 2014년까지는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임명되는 등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올해 1월까지는 김정은이 참관한 군사훈련과 인민무력부 방문을 수행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짐.

■ 北 김영철, 당비서 직함 달고 첫 등장(2/1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김양건에 이어 통일전선부장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당비서라는 직함을 달고 북한 언론에 처음 등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11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함.

■ 北 김정은, 軍 장성급 진급 인사 단행(2/13,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16일)을 사흘 앞두고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13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김상갑과 주동철·심정택·리영민·리송학 등 5명에게 육군 중장을, 허영호에게 내무군 중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방송은 전함.
- 또한 리수경·김광일·장춘원을 해군 소장으로, 안병칠·최철수를 항공군 소장으로 승진시켰고, 남길학·김일웅을 미사일 담당 전략군 소장으로 각각 발탁했다고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김정일 생일 띄우기…'답사행군에 얼음축전까지'(2/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일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 밀영 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도함.

- 지난 1일 혜산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은 장현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은 토론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대원들은 모임이 끝난 뒤 행군을 시작했다고 방송은 설명함.
- 이어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첫 수소탄 시험의 장쾌한 폭음을 높이 울린 끝없는 환희와 격정을 안고 용기백배 기세 드높이 백두의 행군길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영광의 5월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청년전위들의 철석의 신념과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쳐갈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임.

■ 北, '미사일 발사 성공' 자축…"또 하나의 승리"(2/8, 노동신문, 조선중앙TV)

- 노동신문은 이날 총 6개면 전체를 '광명성4호' 발사 소식에 할애해 '성공'을 자축했으며 특히 1~3면에는 발사 명령을 승인하거나 미사일 발사대 앞에서 관계자들과 단체로 기념 촬영하는 김 제1위원장의 모습, 발사 소식에 기뻐하는 주민들의 모습 등을 담은 사진 수십여장을 실음.
- 조선중앙TV도 8일 오후 7시(평양시간 6시30분)부터 15분간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을 기념해 평양 대동강변 주체사상탑 주변에서 진행한 불꽃놀이를 실황 중계 방송함.
- 한편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는 황병서, 김영남,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 김원홍, 곽범기, 태종수, 로두철, 박영식, 윤동현 등 고위 간부 다수가 자리한 가운데 '광명성 4호' 발사를 기념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가 열렸으며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7시40분(한국시간)부터 약 20분간 행사를 녹화 방송함.

■ 北, 장거리 미사일 관련자 환영…평양거리에 수십만명 동원(2/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광명성 4호' 발사 관여자들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대혁명전시관으로부터 용흥네거리, 개선문거리, 창전거리, 대학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는 수십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고 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의 책임일꾼 등이 3대혁명전시관 앞에서 발사 관여자들을 맞이함.

■ 북한, 김정일 생일 앞두고 사진전 등 기념행사(2/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들은 광명성절 기념 중앙사진전람회 '인민을 위한 한평생'의 개막식이 1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보도함.
- 행사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진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광명성절 기념 영화상영주간 개막식도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임.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비전향장기수 리인모 외손녀 글 공개…"代이은 충성" 주문(2/2, 연합뉴스; 1/31,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월 31일 자 3면에 리 씨의 외손녀 오보람 씨가 쓴 수기 '그 사랑 못잊습니다'를 보도하면서 주민들에게 리 씨의 가족처럼 '대(代)를 이은 충성'을 주문했다고 연합뉴스는 2일에 보도함.
- 오 씨는 "외할아버지가 조국의 품에 안겨 보낸 14년간의 나날은 남에서의 세월에 잃었던 인간 본연의 모든 것을 되찾고 사람이 꿈에서조차 비랄 수 없는 행복을 누려온 재생과 만복의 나날이었다"고 주장함.
- 이어 "오늘 우리 인민은 또 한 분의 인민사랑의 정치가인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세상이 부러워할 복을 받아 안고 있으며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민사랑의 역사는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고 전함.

■ 北 "위성발사·수소탄 보유 군사강국"…체제결속 독려(2/4, 조선의오늘)

-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북한이 '증강된 군사력'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내부 결속을 독려했다고 조선의오늘은 4일 보도함.
- 매체는 "(북한이)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존엄과 수소탄까지 보유한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의 위용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할 소리를 다 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미제의 악랄한 정치 군사적 위협과 제재 봉쇄 책동도, 역사의 온갖 반동들의 회유와 압력도 우리의 강인 담대한 배짱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민족 자주를 제일 생명으로 여기는 확고한 입장, 한 번 결심한 문제는 천만 시련이 막아나서도 끄떡없이 밀고 나가는 드센 배짱, 적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나가는 대담한 공격 정신”이 김 제1위원장의 ‘영도적 풍모’라며 ‘수령 결사옹위’ 정신을 주문했다고 전함.

■ 北, 대북제재 앞두고 ‘일심단결’ 독려…“조국사수 최강무기”(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일심단결이야말로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최강의 무기”라며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미제의 끊임없는 새 전쟁 도발책동, 혹심한 자연재해,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 우리 혁명이 백승의 전통을 창조하고 이어온 것은 기적”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지난 2~3일 김정은 제1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인민군위원회의 연합회의·확대회의가 “수령, 당, 군대,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천백 배로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함.
- 이밖에 신문은 “우리를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비열한 심리모략전과 부르조아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아무리 교활하고 악랄해도 우리의 일심단결은 끄떡없다”며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해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北, 정규군 창설일 띄우기…“백승의 최정예 무력”(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백승의 전통을 이어가는 최정예 정규적 혁명무력’ 기사에서 정규군이 만들어진 1948년 2월8일을 “조선의 혁명발전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 이룩된 날”이라고 부각함.
- 통신은 김정은 체제 들어 정규군의 무력이 더욱 강화됐다면서 “상용무기에 의한 국지전이나 전면전쟁, 전자전과 핵전쟁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대결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 수단들과 필승의 전법을 완비한 강군으로 자라났다”고 밝힘.
- 그러면서 항공 및 반항공군의 비행전투훈련, 적 해상 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 섬 화력 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 신형 반함선 로켓의 시험발사,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며 "장쾌한 포성들은 적대 세력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고 주장함.

■ 北매체 '위성발사 성공' 대대적 선전(2/7, 조선중앙TV, 중앙방송, 평양방송, 연합뉴스)

- 북한은 7일 낮 12시(이하 평양시간) 대내용 방송 매체인 조선중앙TV와 중앙방송, 대외용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을 통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했다"고 보도함.
- 이들 매체는 정오 방송 1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특별 중대보도가 있겠다"는 예고 방송을 4차례나 내보내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제사회는 물론,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으며, 특히 중앙TV의 경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일 광명성 4호 발사를 직접 서명하며 승인하는 모습과 친필 사인을 내보내 이번 발사가 김 제1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4호'의 발사 준비를 끝냈다며 올린 보고서 한 가운데에 "당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2016년 2월7일 오전 9시에 발사한다"는 글을 비스듬하게 쓰고 "김정은 2016. 2. 6"이라고 적음.

■ 北매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연일 자축(2/9,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9일 북한의 최대 명절인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2월16일)을 앞두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천만 군민이 크나큰 기쁨에 휩싸여 있다"고 자축함.
-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자강력 제일주의가 안아온 장쾌한 뇌성'이란 글에서 "인공지구 위성 제작국, 발사국,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 광명성 4호의 성과적 발사로 온 나라가 전례 없는 경축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함.
- 또한 '우리민족끼리'도 광명성 4호의 위성궤도 진입 소식을 전하며 '민족사적 대경사, 위대한 승리',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라고 치켜세움.

■ 北인민무력부장 "자주권 침해하면 죽탕쳐 버리겠다" 위협(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12일 백두산에서 열린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연설을 통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원수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몰골을 볼품없이 만들겠다)"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또한 그는 “조선인민군대는 김정일 동지를 백두산 대국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 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군 건설 업적을 옹호 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 나가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전함.
-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청년 전위들은 하늘땅이 열백번 뒤집히고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상과 신념의 제일강자가 되겠다”고 연설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북한, ‘미사일 발사 성공’ 詩로도 자축(2/14, 노동신문)

- 노동신문 14일자에는 미사일 발사를 축하하거나 이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치적으로 찬양하는 시 3편이 한꺼번에 실리면서,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경축 분위기를 이어가는 북한이 시(詩)로도 ‘발사 성공’을 자축함.
- 북한 김남호 시인은 ‘승리의 봄우뢰’라는 제목의 시에서 “장엄한 봄우뢰가 터졌다. / '광명성－4' 호 발사성공！/ 우주만리에 닿은 / 우리의 기쁨을 다 담기엔 /정녕 / 이 행성이 너무도 비좁구나”라고 말했으며, 류금석, 최남순 시인 또한 미사일 발사를 자축하는 시를 발표함.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委 제7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2월 1일 평양 진행 및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보고)과 「농근맹」 중앙위원·후보위원들과 중앙·지방의 「농근맹」 일꾼 등 참가(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생일(2.16)’ 즈음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개막식, 2월 1일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리일환(黨 부장)·김용진(내각 부총리)·리종무(체육상 개막사) 등 참가(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0차 김정일화축전 선전화, 김정일 생일(2·16) 즈음 창작(2.2, 중앙통신)
- 北, 김정일 생일(2.16)을 맞아 지식인들에게 학위·학직 수여(2.3, 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2.16)’ 경축 북한 영화감상회(예술영화, 벼꽃), 2월 4일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 및 김인범(문화성 부상)과 주북 각국 외교 대표 등 참가(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정규적 혁명무력 탄생(‘48.2.8)’ 즈음 공화국영웅(지영춘 발언) ·직맹 일꾼들·노동자들·직맹원들의 상봉모임, 2월 4일 평양 선교편직공장 문화회관에서 진행(2.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생일’ 즈음 전국 청소년학생들의 맹세모임, 2월 5일 전용남(청년동맹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밀영 고향집 앞에서 진행(2.5, 중앙통신)
- ‘정규적 혁명무력’ 결성(’48.2.8)일 즈음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 덕성연구발표모임, 2월 5일 김정순(여맹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사상적 기초이며 근본초석’이라며 ‘전체 인민들은 김정은을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2.6, 중앙통신·노동신문)

- '정규적 혁명무력' 결성(2.8)일에 즈음하여 '1948년 2월 8일은 조선의 혁명 발전과 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특기할 사변이 이룩된 날'이라며 '인민군은 핵전쟁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대결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군으로 자라났다'고 주장(2.6, 중앙통신)
- '정규적 혁명무력' 결성(2.8)일을 맞아 '김일성은 선군혁명의 개척자이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군혁명 업적은 세계의 군 건설사와 우리(北) 조국 역사에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주장(2.8,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사일(광명성-4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평안북도·황해남도·함경북도 도 군민경축대회, 2월 9일 각각 진행(2.9, 중앙통신)
- 근로단체출판사 창립('46.2.9) 70돌 기념 보고회, 2월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9, 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2.16)' 즈음 대학생 예술소조종합공연(김일성종합대학·원산농업종합대학 등), 2월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및 최태복(黨 비서)·최상건(黨 부장)·김승두(교육위원장) 등 평안남도·자강도·함경남도·남포시, 2월 10일 미사일 〈광명성-4호〉 발사 성공 군민경축대회 각각 진행(2.10, 중앙통신)
- 미사일 〈광명성-4호〉 발사 성공은 '조선의 억센 힘, 역사적장거'라며 全民은 '주체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 그 기세로 강성국가 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자'고 독려(2.10,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사일 〈광명성-4호〉 발사(2.7)에 기여한 성원들, 2월 12일 인민군 무장장비관 참관 및 문수물놀이장 방문(2.12, 중앙통신)
- '김정은 새해 신년사 관철' 선전화 출판(2.12,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2.11), '수령 영생 위업 실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크게 공헌한' 홍창의·장재영에게 김정일 훈장 수여(2.13, 중앙통신)
- 미사일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2월 13일 과학기술전당·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및 평양교예극장에서 종합교예공연 관람(2.1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2월 14일 류미영(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95회 생일상 전달(2.1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혜산-삼지연 넓은 철길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2.14,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2월 14일 故 로정완(인민과학자 교수 박사인 김책공업대학 연구사) 영전에 화환(2.1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에게 충정을 맹세하는 육·해·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예식, 2월 14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2.14, 중앙통신)

3.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제재 대비 식량증산 독려…"쌀창고 든든하면 금성철벽"(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사설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위업에 당황망조한 원쑤들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표를 식량난 조성으로 정하고 최후발악을 다하고 있지만 나라의 쌀 창고가 든든하면 우리의 사회주의는 금성철벽"이라며 "알곡생산 투쟁에 총돌격, 총매진"할 것을 주문함.
- 신문은 이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쌀"이라며 "쌀만 많으면 앞으로 그 어떤 최악의 역경이 닥쳐온대도 두렵지 않으며 자강력으로 얼마든지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를 지키고 나라의 경제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높은 알곡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절대로 미룰 수도 드틸 수도 없는 사활적인 투쟁"이라며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려 당 7차 대회 정신을 보위"할 것을 촉구함.

나. 주요 조치

■ 北 "청천강-평남관개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 착수"(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 구상에 따라 청천강-평남관개 자연흐름식 물길이 건설되게 된다"면서 "착공식이 5일 (평안남도) 개천시 준혁리에서 진행됐다"고 밝힘.
- 착공식에는 곽범기 노동당 비서와 박태성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덕훈 내각 부총리의 보고에 이어 리흥규 현장지휘부 부책임자와 김룡일 금속공업성 부국장, 리종균 평안남도여단 정치부장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됨.
- 이들은 "청천강-평남관개 자연흐름식 물길이 멋 후날(훗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빛을 뿌리도록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北 김정은 '몸에 좋다' 말에 다양한 메기요리 등장(2/8, 조선의 오늘,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언론 매체들이 지난달 20~21 평양시 평양면옥에서 열린 '급양봉사부문 메기요리경연'에 40여개 기관이 참가해 무려 70여 가지의 창안(창작)요리를 선보였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과 경연대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현장에서 만들어 전시한 요리들은 모두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다"고 주장했으며 조선중앙통신도 "원자재인 메기의 풍미를 돋굴 수 있게 보조자재들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잘 조화시킨 버섯소메기구이, 메기레몬향튀김, 메기감자전 등의 요리들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전함.
-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평양메기공장을 비롯해 5월9일메기공장, 삼천메기공장 등 지난해 메기 양식장만 3차례나 시찰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다. 경제 상황

■ "북한 경제자유지수, 22년 연속 세계 최하위"(2/2, 미국의소리)

- 경제 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경제자유지수에서 북한이 22년째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함.
- 방송은 2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 발표한 '2016 경제자유지수'를 인용해 "북한은 조사대상 178개 나라 가운데 178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제자유지수를 조사해 공개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2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밝힘.
- 방송은 "법치주의 부문에서 뇌물이 북한 경제에 고질적인 문제이고, 중앙 정부와 노동당, 그리고 군대가 외화벌이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면서 "정부 개입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세금 체제가 없고 나라의 자원이 국방 부문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 중국 단둥에 호텔 잇달아 개장(2/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북중 접경도시인 중국의 단둥(丹東)에 호텔을 잇달아 개장하고 영업에 들어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단둥의 소식통은 방송에 “북한 식당이 밀집해 있는 단둥시 개발구(開發區)에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이 지난 가을부터 영업에 들어갔고 그 호텔과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호텔 하나가 영업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어 소식통은 “영업을 시작한 호텔과 곧 개장할 호텔은 객실 20~30개 정도의 소규모 3성급 호텔”이라며 “호텔 간판에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나란히 그려진 것으로 보아 중국기업과의 합작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김정은 집권후 中 파견근로자 연평균 9만명…3만3천명 증가(2/10, 연합뉴스)

- 김정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한 근로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 리뷰(2016년 1월호)의 ‘2015년 북한경제 동향과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김정은 집권 1년 차인 2012년 7만 9천600명에서 2013년 9만 3천30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4년 8만 9천100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지난해 9만 4천200명으로 다시 증가함.
-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북한과 가까운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 3성의 공장과 식당,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짐.

■ “작년 북미 교역 80% 감소…인도적 지원이 대부분”(2/11, 미국의소리)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1일 미국 상무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과 미국의 교역액이 475만 2천 달러로, 2014년 2천400만 달러보다 80.2% 줄었다”며 교역액은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으로, 인도적 지원이 대부분이라고 전함.
- 작년 미국의 대북 수출 품목을 보면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39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82.1%를 차지했으며 닭·오리 등 도축된 가금류(20만 달러), 설탕(1만 6천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음.
- 이들 품목의 수출은 미국 정부의 대북 수출 제한 및 금지 방침 탓에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北, 대북제재 논의에도 5월 평양무역박람회 개최 예정(2/12, NK이콘워치)

- 북한이 잇단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오는 5월 평양 무역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NK이콘워치가 12일 보도함.

- 주로 북한의 경제 동향을 소개하는 NK이콘워치가 중국의 인터넷 기업 엑스이지(Ex-Easy)가 발행한 '2016 평양 춘계 국제상품박람회' 홍보전단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5월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각종 일용품, 식품, 포장재 등의 제품을 전시하는 박람회를 열며 이 행사에는 중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16개국의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임.

- 산림과학원 산림조성학연구소 일꾼-과학자들, "우리식(북한식)의 테라코템 개발" 보도(2.1, 중앙방송·노동신문)
- 황해남도 물길 건설자들의 공사 진척(겨울철 조건에 맞게 혼합물 첨가제를 이용해서 습식공사 등)' 및 선교편직공장 등 편직공업부문의 "명제품, 명상품 생산(염색공정 현대화 등)" 선전(2.1, 중앙통신)
- 고남혁(국가품질감독위 국장), 연초부터 제품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세워지는 등 '품질감독사업'이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2.5,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총리),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건설장과 혜산-삼지연 넓은 철길 건설장 현지요해(2.6, 중앙통신)
- '정규군 창설(2.8)' 68주년 즈음 공화국영웅과 농업근로자들·농근맹원들 상봉모임, 2월 7일 평양시 역포구역 소신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진행 및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 참가(2.7, 중앙통신·중앙방송)
-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1월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 건설 주력(3,000여㎥ 콘크리트 속벽타입 진행, 2만 3,000여㎥ 언제 축조 및 조압수조 타입공사 90%, 발전기실 건축공사 50% 계선) 보도(2.7, 중앙방송·노동신문)
- 평양시 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자급 비료생산과 흙깔이실적 등 당면한 새해 농사차비 본격 추진(2.9, 중앙통신)

4.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北 지하철 역사에 매대 등장…"시장경제 초기 징후"(2/2, 연합뉴스)

- 북한 사회에서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산하는 가운데 평양 지하철 역사에서도 매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싱가포르의 대북교류 민간단체인 '조선익스체인지(Chosun Exchange)'는 2일 페이스북에 평양의 지하철 매대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고 전하며, 이 사진에는 붉은색 옷을 입고 명찰을 왼쪽 가슴에 단 여성이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매대 안에서 색색의 풍선과 탁상시계 등 각종 소품을 판매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함.
- 북한에서 지하철 역사 관리를 인민보안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민보안부가 민간과 지하철 매대를 함께 운영하며 일종의 '자릿세'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스는 덧붙임.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 대북제재 움직임에도 국제체육대회 예정대로 개최(2/4, 미국의소리)

-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전문 여행사로 평양마라톤 공식 파트너 기업인 중국의 고려여행사는 오는 4월10일 예정된 2016 평양 마라톤 대회 참가자 모집에 600명 이상이 몰렸다고 밝힘.
- 지난해 대회에도 외국인이 600여 명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핵실험과 대북제재 움직임이 대회 '흥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스웨덴의 북한전문 여행사인 코리아 콘술트 관계자도 방송에 "지난해보다 많은 사람이 (평양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했다"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회 참가를 취소하거나 정치적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전함.

■ 北 백두산 위치한 삼지연군 이상고온(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꼽히는 양강도 삼지연군이 전날 '2월 11일 기온'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높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밝힘.

- 중앙통신은 이날 “11일 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겨울철에 보기 드문 이상고온 현상이 관측되었다”면서 “량강도(양강도) 김형권군과 삼지연군, 함경남도 장진군을 비롯한 북부의 여러 지방에서는 낮최고 기온이 2.5~10.9℃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보도함.

■ 北 여성들 배우자 선호도에 변화…“당원 대신 부자 선호”(2/13,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 형태인 장마당의 영향으로 사유화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의 배우자 선호도가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방송은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도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로 변해가면서 노동당원증은 점차 대중적인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보도함.
- 또한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예전에 미혼 여성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결혼상대가 노동당원이었지만 지금은 당원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졌다”며 “돈만 많으면 굳이 당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게 요즘 젊은 여성들의 인식”이라고 밝힘.

- 보건부문에서 중앙-지방의 위생방역 기관들간 ‘실시간 감시통보체계’ 확립(통보시간 몇분內 단축 등 방역사업 큰 도움) 등 ‘위생방역 사업 개선 강화’에 주력(2.4, 중앙통신)
- ‘돌칸흙무덤(咸北 화대군 금성리)’ 등 “발해시기 유적들 가운데 국력강화에 크게 기여한 24개 돌유적” 소개(2.4,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38노스, 북한, 연료주입 움직임…1~2주내 발사 가능성(2/6, 연합뉴스)

-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연료주입에 착수한 징후가 포착되었음. 북한은 과거 연료주입 이후 1~2주 내에 미사일 발사를 실행에 옮긴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사전 예고한 대로 오는 8일부터 25일부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3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입수해 판독한 결과 발사대에 연료탱크 트럭이 도착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38노스는 특히 발사장 내부 '수평작업건물' 주변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함. '수평작업건물'은 운송수단을 통해 전달받은 발사체의 단(段)을 수평적으로 배치한 뒤 연결부위와 하부시스템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발사대에 올릴 준비를 하는 곳으로, 이 건물 주변의 움직임을 통해 발사준비 징후를 가늠할 수 있음.

■ 북한, 광명성 4호 궤도 진입 완전 성공(2/7, 연합뉴스)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7일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하였다."고 발표함.
- 북한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3시간 만인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12시) 조선중앙TV 이춘히 아나운서를 통해 발표한 국가우주개발국 '보도'에서 "운반로케트(로켓) '광명성'호는 주체 105, 2016년 2월 7일 9시(한국시각 오전 9시30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46초 만인 9시 09분 46초(한국시간 9시39분 46초)에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자기의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음.
- 보도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5, 2016년 2월 6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할 데 대하여 친필 명령하셨다."면서 김정은의 지시로 광명성 4호가 발사됐다는 사실을 강조함.

■ 北수주-수개월내 플루토늄 추출시작 가능, 이동식ICBM 배치단계(2/10, 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의 핵단지에서 수 주에서 수개월 내에 플루토늄 추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클래퍼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출석에 앞서 서면증언을 통해 이같이 진술하며, "북한이 3차 핵실험 후인 2013년에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흑연감속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5MW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핵시설의 재정비·재가동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실제 영변의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음.
- 그는 특히 "북한은 충분히 오랫동안 원자로를 가동해 왔으므로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그 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하였음.

■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 북한, 핵무기 최대 20기 보유(2/10, 연합뉴스)

- 9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10~20기의 우라늄, 플루토늄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이는 약 1년 전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이 최대 16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 데 비해 늘어난 수치임. 교도통신은 파인스타인 위원장의 발언이 미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수집한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 한편,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서 수 주에서 수개월 내 핵폭탄 제조 핵심 물질인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美전문가, 北, 재진입체 기술 확보 못 해…ICBM까진 난제 여전(2/10, 연합뉴스)

-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미 항공우주분야 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전력화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 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밝힘.
- 실링 연구원은 이날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을 ICBM으로 발전시키려면 여러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그는 이어 “북한이 로켓 탑재가 가능하도록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더라고 하더라도 시속 2만5천600㎞를 견뎌야 하는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다시 시험해야 한다.”면서 “물론 이는 극복이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며 북한이 때가 되면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였음.

■ 불안→안정→또 불안…美언론 北위성 통제불능 상태(2/11, 연합뉴스)

- 지난 7일 발사된 북한의 ‘광명성 4호’ 위성이 한때 궤도에 진입해 안정된 듯 보였으나 또다시 불안정하게 회전하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힘.
- 미국 CBS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위성이 또 한 번 우주 궤도에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됐고 따라서 무용지물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그러나 전날 미국 폭스뉴스 등은 미국 관리를 인용해 북한의 위성이 궤도에 진입해 안정 상태를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음.
- 현재 광명성 4호 등 북한 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와 위성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분석은 시시각각 엇갈리고 있음.

■ 北, 이동식 ICBM ‘KN-08’ 배치하면 3개 미사일벨트 완성(2/14, 연합뉴스)

-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류되는 KN-08의 실전배치를 끝내면 북한 전역에 구축된 3개의 미사일 벨트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음.
- 북한은 유사시 전략적인 목적에 따라 전방과 중앙, 후방지역에 각각 스커드 미사일 여단, 노동 미사일 여단, 무수단 여단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짐.
- 특히 후방에 사거리 3천㎞의 무수단(BM-25) 중거리미사일에 이어 사거리 1만㎞ 이상의 KN-08까지 추가되면 북한 전역이 ‘전략·전술미사일 기지’로 변해 위협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 北, 이동식 ICBM 부대 ‘KN-08 여단’ 창설…실전배치 단계(2/14, 연합뉴스)

- 북한군이 최근 미사일부대를 총괄지휘하는 전략군 예하에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대인 ‘KN-08 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군이 KN-08 여단을 전략군 예하 부대로 정식 편성한 것은 이동식 ICBM인 KN-08이 사실상 실전배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함. KN-08 여단이 정식 편성됨에 따라 북한의 전략군은 ‘KN-08·무수단·노동·스커드여단’ 등 4개 전략 및 전술 미사일여단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 미사일부대를 통합지휘하는 전략군이 이런 체제를 갖추면서 지휘관도 대장으로 격상됨. 북한은 지난해 말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을 상장에서 대장으로 진급시킨 것으로 알려짐.

나. 미 · 북 관계

■ 美7함대, 北미사일 추적위해 이지스함 배치…日도 이지스 동원(2/4,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여러 대의 이지스함을 배치했다고 NHK가 4일 보도함. NHK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7함대는 복수의 이지스함을 배치해 북한 탄도 미사일을 추적·감시하고 확보한 정보를 요격 부대에 보낼 태세를 정비하고 있음.
- 미 해군 7함대는 이지스함 배치 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 서해와 제주도 남서 해역을 거쳐 필리핀 루손섬 앞 태평양에 떨어지는 북한 미사일의 예상 궤적을 감안, 동중국해 등에 배치했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미 7함대는 또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등과 협력해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는 전함.

■ 北, 한미 '키 리졸브' 계획에 "위험천만 불장난" 맹비난(2/5, 연합뉴스)

-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북한은 다음 달로 예정된 '키 리졸브' 등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맹비난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악명 높은 최신 핵타격 수단이 투입되는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이 4D 작전계획에 따라 감행된다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 위험을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으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고 주장했음. 또한, "남조선 호전광들은 겨레의 드높은 통일 지향에 역행하면서 외세와 야합해 북침전쟁 도발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 이성 잃은 핵전쟁 광신자들"이라고 주장하였음.
- 한편, 4D 작전계획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4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작전계획으로, 한미 양국 군은 이르면 이번 키 리졸브 연습 때 이를 처음 적용할 예정임.

■ 북한 감싸지마라 美의회, 北과 거래한 중국기업도 제재추진(2/6, 연합뉴스)

- 강력한 북한 제재를 위해 미국 의회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조항을 담은 북한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법안은 과거 '이란 제재법'을 본뜬 것으로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주요 표적이 될 전망임. 미국은 이란 경제제재 당시에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 북한, 미국 슈퍼볼 킥오프 때까지 로켓발사 준비(2/6, 연합뉴스)

- 북한이 슈퍼볼 킥오프 때까지 장거리 로켓의 발사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영국 데일리메일 등이 미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앞서 북한은 인공위성을 확보한다며 오는 8~25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통보한 바 있음.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 왕성한 방어를 제공할 다양한 미사일 방어 자산을 갖추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태평양사령부 대변인 코디 칠스 해군 대령은 "미군 태평양사령부 병력이 미국 본토를 보호하고 동맹국 남한과 일본을 방어할 준비가 됐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음.

■ 미국, '북한미사일' 추적함 일본 후쿠오카 사세보에 긴급배치(2/6,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하워드 로렌젠 호(號)를 이번주에 일본 후쿠오카 사세보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미국 해군의 한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하워드 로렌젠 호가 후쿠오카 사세보 항에 통상적 역내 훈련의 일환으로 입항했다."고 확인함.
- 이 대변인은 "이 함정은 7함대 사령부 소속이면서 미군 해상수송사령부에 의해 운영되는 함정"이라고 소개하고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고 있어 전 세계적 차원의 고품질 탄도미사일 추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7함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 美하원 의원들, 대북 제재 즉각 나서야 압박(2/7, 연합뉴스)

- 미국 연방하원 의원들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압박함.
- 이와 동시에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들 양국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가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이익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대적 발걸음을 뗐다."면서 "북한이 현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은 실패했음이 더욱 자명해졌다."고 비판함.
- 지난달 12일 하원에서 통과된 로이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임.

■ 초강경 오바마…美, 제재 칼 빼들고 한일과 공조(2/7, 연합뉴스)

- 북한이 6일(현지시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미국이 대북 초강경 모드에 돌입함.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참모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수장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개인 명의의, 그것도 초강경 어조의 성명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 더욱 주목해볼 대목은 백악관이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쓴 점임. 통상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주로 써왔는데, 이는 북한이 추진 중인 미사일 프로그램이 한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본토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 프로그램보다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하고 있음.

■ 존 케리 미 국무, 국제사회, 이제는 강경하고 단합된 행동할 때(2/7,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케리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두 번째로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케리 장관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리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회원 및 우방들과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주요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백악관, 안보리 결의 노골적 위반…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2/7, 연합뉴스)

-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규탄함.
- 백악관은 이날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강한 것은 역내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힘.
- 백악관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은 우리와 동맹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역내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작년 북미 교역 80% 감소…인도적 지원이 대부분<VOA>(2/11, 연합뉴스)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1일 미국 상무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과 미국의 교역액이 475만 2천 달러로, 2014년 2천400만 달러보다 80.2% 줄었다.”고 보도함.
- 교역액은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으로, 인도적 지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작년 미국의 대북 수출 품목을 보면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39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82.1%를 차지함. 닭·오리 등 도축된 가금류(20만 달러), 설탕(1만 6천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이들 품목의 수출은 미국 정부의 대북 수출 제한 및 금지 방침 탓에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반면 미국의 대북 수입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남.

■ 북한, 美 전략자산·사드, 아태 지역 대국 제압용 주장(2/11, 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미국의 무력 증강의 본질을 꿰뚫어봐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추가 전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논의 등은 "주변 나라들의 전략 무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음.

- 신문은 "(미국의) 최첨단 핵무장 장비들은 우리 공화국만을 침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작전 반경은 조선 반도를 벗어난다."며 특히 사드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국들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여론의 일치한 평가"라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러시아 테베 첸트르 TV가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계는 러시아,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까밝혔다."고 러시아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 협력에 대항한 북·중·러 3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함.

■ 미국,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로 MD 체계 평가·성능 향상 검토(2/11,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사일 방어(MD) 체계 평가와 성능 향상 검토 작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임.
- 10일(현지시간) 미 해군연구소(USNI) 등 관련 연구소들과 더내셔널인터래스트(TNI) 등은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군사 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역내 MD 체계 향상과 함께 미 본토 배치 MD 능력 개선 등 조치와 함께 유사시 북한의 전략군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군사태세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군연구소 등은 지적함.

■ 美의회 北에 고강도 채찍…하원 통과 시 北겨냥 첫 대북제재법안(2/11, 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1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고강도 채찍을 꺼내 들었음. 상원이 이날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법안(H.R. 75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미 의회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이라는 큰 상징성이 있음.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상·하원 한곳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부로 넘어가지는 못함.

- 특히 북한만을 겨냥한 최초의 법안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북한이 이란과 유사하게 미 의회의 제재 대상국으로 특정된(targeting) 것을 뜻하며, 따라서 앞으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 의회가 대(對)이란제재와 같이 고강도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 美, 압살정책에 매달릴수록 한반도 핵전쟁 위험 증대(2/12, 연합뉴스)

- 북한은 12일 "(미국이) 대(對) 조선(북한) 압살정책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이 증대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조선반도는 우발적으로 튄 한 점의 불꽃으로도 삽시에 열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 핵대결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 핵전쟁 위험 증대는) 미국에 대한 세계의 빗발치는 규탄과 함께 미국의 안전보장에도 이롭지 못한 결과들만을 더욱 산더미같이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논평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며 최우선적인 방도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끝장내고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재차 요구함.

■ 미국, 초강력 대북제재법으로 중국 압박…北광물수출 첫 제재(2/13, 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제재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또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수출품인 광물 거래를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킴.
-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최근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 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상원 통과(2월10일) 이틀 만에 하원도 이례적으로 '신속처리 절차(suspension of rules)'에 따라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바임.

■ 美하원 외교위원장, 대북제재법, BDA와 같은 강력한 효과(2/13,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대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 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 의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주의 김정은 정권 그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함.
- 로이스 위원장은 입법을 추진한 배경을 묻는 말에 “북한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목표”라며 “그러나 대화와 협상은 강력한 제재가 부과됐을 때 북한이 시작하게 된다.”고 밝히고 “과거에도 북한은 ‘제재를 언제 해제해줄 것이냐’면서 협상에 응해왔다.”고 지적함.

■ 美국방부, 北특수부대, 고도로 훈련·무장…미사일 위협도 커져(2/13, 연합뉴스)

-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군사력 현황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이 군대와 무기를 현대화하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강조함.
- 특히 정찰, 공수·해수, 특공대 등으로 전문화한 북한의 특수부대가 “가장 고도로 훈련받고 제대로 무장했으며, 최고의 대우를 받아 매우 사기가 높다.”고 평가하며, 또 핵심 특수부대는 외국의 공격에 대한 내부 방어를 포함해 “신속한 공격 작전을 위해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2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이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앞서 작성된 것으로, 북한이 여전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 빅터 차, 북한과 대화창구 열어둬야…창구 닫히면 위험(2/14, 연합뉴스)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 한국석좌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것을 우려하며 북한과의 대화창구는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기도 한 빅터 차는 이날 미국 뉴저지 주 프린스턴대에서 열린 ‘북한인권 콘퍼런스’에서 기조 발언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창구가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함.
- 그는 지난 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제재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 창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라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북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함.

■ 펜타곤, 북한 KN-08 개발시 美본토 상당부분 타격능력(2/14, 연합뉴스)

-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미국 본토의 상당부분을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는 미 군당국의 분석이 나왔음.
- 미국 국방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내놓은 '2015 북한의 군사·안보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과 2013년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일명 '화성 13호'로 불리는 KN-08 6기와 발사대를 선보였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분석함.
- 국방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전인 지난달 초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KN-08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다면 미국 본토의 상당부분을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 같다."고 밝혔음.

다. 중 · 북 관계

■ 중국 정부, 엄중 우려…북한, 신중하게 행동하라 경고(2/3,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했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조선(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3일 밝혔음.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선은 본래 당연히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현재 조선의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이어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조선이 이 위성발사 문제와 관련해 자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임.

■ 중국정부, 우다웨이, 리수용·김계관·리용호와 연쇄 회담(2/4,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4일 북핵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북 결과와 관련, "우 대표는 방북기간에 중국과 북한 양자 관계 및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음.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 대표가 방북 기간에 리수용 북한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북한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잇달아 회담을 했다며 이같이 언급함.
- 지난 2일 방북 길에 오른 우 대표는 이날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해야 할 말은 했다."면서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며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음. 이에 대해 루 대변인은 우 대표의 방북 상황, 대화·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중국의 원칙적 입장만 강조한 뒤 해당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고 전해짐.

■ 中 대북 영향력 한계 노출…중재 노력 '딜레마'(2/4, 연합뉴스)

-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중국이 대북 영향력에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음.
-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년 만에 야심차게 방북한 2일 당일, 북한은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를 통보해 중국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분석을 낳았음.
- 현재로서는 우 대표가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방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베이징(北京)의 외교 소식통들은 관측함. 첫 단추부터 매끄럽지 못했던 방북에서 우 대표는 당초 계획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中, 北에 추가도발 반대입장 전달…춘제의 도발 재연 우려(2/6,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중국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최근 방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음.
- 5일 홍콩 봉황(鳳凰)위성TV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왕 부장은 전날 이 TV와 한 인터뷰에서 우 대표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우리는 6자회담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조선(북한)을 방문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중국은 "지금과 같은 심각한 형세 속에서" 미국, 한국, 러시아와 밀접한 소통을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조선과도 필요한 연락을 취해 그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임.

- 왕 부장은 특히 “(우 대표의 방북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조선을 향해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었다.”며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라고 덧붙임.

■ 북한 외무성, 주북 중·러 대사관과 잇단 친선 모임(2/6, 연합뉴스)

-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주북한 중국 대사관과의 친선 모임을 마련하였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에서 설 명절에 즈음해 5일 중국 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 모임을 마련했다고 보도함. 이날 모임에는 리진쥔(李進軍) 중국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초대됐으며, 리길성 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관계자들이 참가하였음.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4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 등을 초청한 가운데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과의 친선 모임을 엶.
- 이처럼 북한이 중국·러시아 대사관과의 모임을 잇달아 마련한 것은 중·러와의 친선 관계를 과시하며 지난달 4차 핵실험과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로 말미암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한 방편으로 보임.

■ 중국, 北발사 강행 유감…각국 냉정히 행동하고 대화 재개해야(2/7,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힘.
-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선포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관 당사국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의 이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
- 그러나 화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신중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와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믿고 있다.”며 각 당사국은 마땅히 접촉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함으로써 정세의 격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남북한 대사 부른 中, 북한엔 '원칙적' vs.한국엔 '엄정한' 입장(2/9, 연합뉴스)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공식 착수한다고 밝힌 지난 7일 중국 당국이 주중 남북한 대사를 불렀지만 항의의 표현은 약간 달랐던 것으로 전해짐.
- 중국 외교부는 "류전민(劉振民) 부부장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긴급히 불러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항의했다."면서 "중국의 원칙(原則)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힘.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류전민(劉振民)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히 불러 한국이 한미가 정식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면서 "중국의 엄정(嚴正)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공개함.
- 이와 관련,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 대사를 불러 '원칙적' 입장을 전달한 것과 우리나라 대사를 불러 '엄정한' 입장을 전달한 것의 차이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음.

■ 김정은 집권 후 中 파견근로자 연평균 9만 명…3만 3천명 증가(2/10, 연합뉴스)

- 김정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한 근로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 리뷰(2016년 1월호)의 '2015년 북한경제 동향과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김정은 집권 1년 차인 2012년 7만 9천600명에서 2013년 9만 3천300명으로 크게 늘었음. 이어 2014년 8만 9천100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지난해 9만 4천200명으로 다시 증가함.
- 중국에 파견한 북한 근로자 수가 김정은 체제 이후 4년간 연평균 8만 9천50명에 이른 셈임.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이었던 2005년~2011년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근로자는 4만 6천800~7만 5천300명으로 연평균 5만 6천800여 명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짐.

■ 中학자, 북-중관계, 동맹 아니고 한-중관계보다 약해(2/11, 연합뉴스)

- 중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칭화(淸華)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옌쉐퉁(閻學通) 교수는 지난 9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을 동맹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10일 보도함.

- 옌쉐퉁 교수는 “중국 정부는 이미 2013년 북한과 동맹 관계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면서 “양국 지도자가 수년간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는데 동맹이면 그럴 수가 없다.”고 언급함.
- 그는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은 파키스탄 뿐”이라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비해서도 오히려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

라. 일 · 북 관계

■ 日 오키나와 두곳에 패트리엇 배치(2/3,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의 궤도로 예상되는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지마(石垣島)와 미야코지마(宮古島)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를 배치할 계획임.
-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 간부는 “북한의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 통고에 따라 미사일 경로에 가까운 두 곳에 PAC3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음.
- 앞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도록 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고 발표했음.

■ 北 역사학계, 한일 위안부 합의, 용납될 수 없다 주장(2/6, 연합뉴스)

- 북한의 역사학계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미국, 일본, 남조선 집권세력이 야합해 조작해낸 합의”라고 규정하고 “전면무효이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함.
- 북한 역사학 학회 대변인은 6일 성명을 통해 “역사를 등지고 시대의 요구, 대세의 흐름에 역행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를 조작해낸 일본과 남조선 집권세력 그리고 이번 합의를 배후조종한 미국의 반역사적 망동을 공화국의 전체 역사학자들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반인륜적인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죄악의 역사는 그 무엇으로 써도 덮어버릴 수 없다.”며 “우리 역사학자들은 수십 만의 일본군 성노예 범죄 피해자들을 다시금 모독한 백년숙적 일본과 역적의 무리 괴뢰패당과는 끝까지 결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日 집권당 간부, 北 미사일 위협 거론하며 안보법 의의 강조(2/6,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는 북한이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안보법 정비로) 한정적인 집단자위권을 갖추지 않으면 미·일 동맹이 잘 작동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6일 말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후쿠오카(福岡)시 강연에서 "북한이 최저 300발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거의 일본 전체를 사거리에 넣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함.
- 고무라 부총재는 "북한 지도자가 일본을 공격하면 미국에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억지력이다."고 덧붙임.

■ 아베, 발사 강행 용납 못해…국제사회와 연대해 의연히 대응(2/7,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이 7일 사실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음.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미사일 발사 직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반복해서 자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음.
- 그는 "핵실험에 이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다. 국제사회와 연대해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 또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것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강조함.

■ 일본 즉각 추가제재 검토…대북제재 논의 주도(2/7,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의연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일본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음.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에 이어 북한에 인접한데다 양측 간 거래 단절 등 관계가 악화한 상황인 만큼 일본이 느끼는 위협이 크기 때문임.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일본 독자 대북 제재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과 궤를 같이함. 일단 일본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검토해 온 대북 독자제재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됨.

■ 조선총련 교토본부 건물 경매…미사일 후폭풍 속 북한 압박(2/9, 연합뉴스)

-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일본 정부가 독자 대북 제재를 모색하는 가운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지방 본부 건물이 경매에 넘겨질 것으로 알려짐.
- 9일 교토신문에 따르면 조선총련의 교토부(京都府)본부가 입주한 교토시 소재 '교토조선회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앞서 경매 개시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경매 개시 결정은 작년 11월 20일 교토지방재판소가 내린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이뤄진 것이지만, 지난달 제4차 핵실험과 최근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박 소재로 여겨질 전망임.

■ 日국회, 北 미사일 항의 결의문 채택…용서하기 힘든 폭거(2/9, 연합뉴스)

-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함.
- 중의원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일본 정부는 독자 제재를 통해 핵·납치문제도 병행해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함.
-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독자 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해 의연하고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음.

■ 日, 北국적자·선박입국금지…100만원 이상 대북송금 금지(2/10,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함.
- 앞으로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이 불가능해짐. 또 일본에서는 인도적 목적이라고 해도 10만 엔(약 10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북 송금도 불가능해졌음.
-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며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짐.

■ 조선총련, 日 대북제재 부활은 북일합의 파기…철회 촉구(2/12, 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등에 맞서 대북 독자제재를 부활시킨 데 대해 "명백한 약속 위반이며 양측이 2014년 체결한 '스톡홀름 합의'의 일방적인 파기"라고 주장함.
- 12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남승우 조선총련 부의장은 이날 도쿄 조선총련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제재 철회를 요구하였음.
- 그는 "위성 발사는 국제법에 근거해 주권국가에 인정되는 권리"라고 주장하며, 또 일본의 제재가 방북한 조선총련 직원의 재입국 불허 등을 포함한데 대해 "재일동포의 생활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억압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 북한,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 '특별조사위' 해체(2/12, 연합뉴스)

- 북한은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착수키로 한데 대한 대응조치로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특별조사위원회 담화를 통해 "2016년 2월 12일부터 조일(북일) 정부 간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진행해온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전면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고 밝힘.
- 담화는 이어 "일본의 도발적인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면서 "오늘의 엄중한 후과를 산생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 정권이 져야 한다."고 위협하였음.

■ 日, 납치 재조사 중지 북한에 항의…일방적 합의 파기(2/1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3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중지하겠다고 전날 발표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엄중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캐나다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재조사 중지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계속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납치문제담당상도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은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할 생각이 없다.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음.

■ 日정부, 북한과 납치문제 물밑 협상 계속 방침<산케이>(2/14,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한다는 기조에 따라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의 물밑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14일 보도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귀국과 관련한 성의 있는 대응을 하면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하고, 물밑 협상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함.
-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2014년 5월 북일 '스톡홀름 합의'를 유지하고 대화의 문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북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중국 선양(瀋陽) 등에서 한 달에 한 두차례 페이스로 진행해 온 비공식 협의를 (북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함.

마. 러 · 북 관계

■ 北 박명국 외무성 부상, 러시아서 귀국(2/6, 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했던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6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러시아에 갔던 박명국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표단이 6일 귀국했다."고 짧게 보도했음. 박 부상 등은 지난달 29일 러시아를 방문해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 이 협정 이행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함.
-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협정 체결로 러시아 당국이 불법 체류자로 적발한 북한 주민들을 철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추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우려하고 있음.

■ 러 외무, 유엔 안보리 이외 독자 대북 제재는 안 돼(2/14, 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제재 이외의 양자 제재 등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3일 (현지 시간)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최근 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했으며 이는 북한 지도부의 무책임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의 결과"라고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비난함.

- 라브로프 장관은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를 우회해 북한을 응징하는 일방적인 행보를 취하고 대화를 통해 상황을 안정화시키려는 공동의 노력에 해를 끼치면서 역내에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함.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이미 지난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한미 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논의 등을 겨냥, “미국 글로벌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요소의 역내(한국)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 핵문제를 추가로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바. 기타

■ 반기문,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말아야(2/5,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8~25일로 예고된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에 대해 철회를 촉구함.
-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음.
- 북한은 전날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잇따라 통보함. 이는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시도로 관측되고 있음.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유엔 패널, 이르면 내주 대북제재위에 北제재안 보고(2/5,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이 이르면 내주 대북제재위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4일(현지시간) 알려짐.
- 대북제재위는 이를 토대로 3월 초 안보리에 제재안을 보고할 예정이어서, 내주부터 유엔에서의 대북 제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기존보다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왔음. 전문가단이 대북제재위에 내는 제제안은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짐.
-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문가단이 북한의 ‘군수공업부’와 ‘국가우주개발국’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이날 보도함.

■ 유엔보고서, 북한, 중국산 드론 수입해 군사적 사용 우려(2/6,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는 중국산 무인기(드론)가 북한에 의해 군사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드론의 대북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는 북한군 정찰총국이 운용하는 드론이 중국 베이징(北京)에 본사를 둔 업체인 '마이크로플라이'의 무인기 'UV10'과 비슷하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마이크로플라이에서 중국 내 기업을 위해 출하한 제품이 중개자를 거쳐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으며, 보고서는 북한군에 의해 정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무인기를 탄도미사일 관련품으로 규정해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함.

■ 유엔 기밀보고서, 10년 동안의 유엔 대북제재, 실패했다(2/9, 연합뉴스)

- AFP 통신이 8일(현지시간) 입수한 유엔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현재 유엔 대북제재의 효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함.
-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몇몇 유엔 회원국들 특히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았고 북한이 제재에 불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음.
- 33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소수 국가와 거래를 했다고 설명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한국·일본 강경대응은 주권사항(2/4,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예고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강력한 대응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권국가로서의 결정사항"이라고 밝혔음.
-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권국가로서의 결정 사항"이라며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양국에 문의해 달라"고 말함.

- 이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한국 시간으로 3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함. 조 차장은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음.

■ 한·미·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금융 제재 추진(2/7, 연합뉴스)

- 한국·미국·일본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를 모색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한 미·일은 제3국 기업이 핵·미사일 개발과 관계있는 북한 단체나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제재 참가국 금융기관이 이 기업의 금융 거래를 엄격하게 제안하도록 하는 4차 북한 핵실험 제재 방안을 추진 중임.
- 한·미·일은 이달 6일까지의 고관 협의에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이처럼 북한 측과 거래하는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제재 구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 이순진 합참-한미연합사령관 화상회의…긴밀한 대북공조(2/7, 연합뉴스)

- 이순진 합참의장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함.
- 이 의장은 이날 오전 스캐퍼로티 사령관과의 화상회의에서 양측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토대로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했다고 합참이 밝힘.
- 두 사람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평가작업도 했음.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함.

■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공식 협의…北핵·미사일 대응(2/7,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힘.

-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하였음.

■ 오바마, 미사일방어능력 향상위해 한국과 최초로 협의 중(2/9,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으로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 (미사일)이 미군 시설이나 미국인들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막기 위해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에 관해 한국과 최초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음.
-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 날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 미군 배치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임.
-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도발과 관련해 "향후 일정을 못 박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조치(사드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언급함.

■ 美 핵잠수함 다음 주 한국 온다‥대북, 무력시위(2/11,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다음 주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를 한국에 보내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다음 달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CVN-74)호를 한국에 파견하는 등 주요 전략무기를 잇달아 한국에 보내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임.
- 군 관계자는 11일 "미 해군의 핵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가 다음 주 한국에 오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며, "미군은 주요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의 잇단 도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음.

■ 美,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결정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2/1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과 관련,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힘.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며, "한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음을 안다."면서 "이번 결정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 러셀 차관보는 특히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경제 및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국제경제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함.

■ 日언론, 한미일, 내달말 워싱턴서 정상회담 추진(2/11, 연합뉴스)

-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별도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1일 전함.
- 이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한미일이 결속해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분석함.
-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미 정상과 직접 접촉해 연대를 확인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된다고 보고 지난 9일 양국 정상과 개별적으로 통화했다고 지지통신은 덧붙임.

■ 국방부, 사드 장소 선정 시 군사적 효용성 최우선 고려(2/12, 연합뉴스)

- 국방부는 12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장소를 선정할 때 '군사적 효용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장소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 사드 배치 장소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로 풀이됨.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대구, 평택,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음.

■ 한미, 안보리 끝장결의 공조…케리 개성공단 용기 있는 조치(2/13, 연합뉴스)

-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영국, 미국, 러시아 외교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공조방안을 협의함.
- 윤 장관은 이들 면담에서 안보리 결의와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돼야 한다면서 협조를 당부하였음.
-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의 '끝장 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전방위적 외교노력을 평가하고 강력한 결의 채택을 위한 협의 가속화를 다짐한 것으로 전해짐.

■ 한국 온 美 패트리엇 부대, 사드배치 준비작업하나(2/14,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최근 한국에 전개한 패트리엇 부대의 상급 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운용한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음.
- 14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에 전개된 부대는 미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주둔 중이던 제11방공포여단 예하 43방공포연대 1대대 D포대로, D포대는 패트리엇 부대이지만 상급 부대가 사드 운용 부대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 준비작업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D포대는 오산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35방공포여단과 여단급·대대급 훈련을 하며 병력·장비의 통합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한국 체류 기간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짐.

나. 한 · 중 관계

■ 中기관지, 한국배치 사드, 탐지거리 관계없이 위험해(2/1, 연합뉴스)

- 한국에 배치되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는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관계없이 모두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중국 기관지가 1일 주장함.
-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중국 항공전문 잡지인 '항공지식'의 왕야난(王亞男) 부편집장을 인용, "레이더 탐지거리가 가깝든 멀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모두 중국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음.

- 그러나 한국 전문가들은 만약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이라는 목적에 맞게 TBR 모드로 고정돼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함.

■ 중국 국방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주장은 사실 아니다(2/5, 연합뉴스)

- 중국은 자국 군용기들이 최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말라."고 반박함. 중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2일 오후 "유관방면(한국)은 사실을 존중 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힘.
-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중국 군용기 2대가 지난달 31일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구역에 침범했다고 발표했음. 중국군 항공기들은 제주도 남서쪽이어도 상공에서 KADIZ를 침범했고, 우리 군의 경고 방송에 즉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짐.
- 중국 국방부의 이번 공식 입장은 결국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있는 한국 측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됨.

■ 中, ICBM·항모킬러 동시 발사훈련…韓美 사드행보에 경고음(2/5, 연합뉴스)

- 최근 창설된 중국의 전략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하는 장면이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됨.
- 5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관영 중국중앙(CC)TV는 지난 3일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아 기층(부대)을 가다.'라는 기획성 보도를 통해 로켓군 소속 '둥펑-31 기동형 전략미사일부대'의 동계훈련 장면을 방영했음.
- 이처럼 중국군이 신설된 로켓군의 훈련 모습을 잇달아 공개하고 나선 것은 미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행보에 돌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시진핑, 한반도에 핵도,전쟁도 안돼…평화·안정에 노력하겠다(2/6,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힘.

-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이날 저녁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현재의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발표함.
-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시종일관 대화와 협상이란 정확한 방향을 관련 당사국이 견지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으며, "중국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관한 중국의 '3대 원칙'을 거론했다고 전해짐.

■ 중 외교부, 한미 사드 공식협의에 깊은 우려…신중 처리(2/7,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음.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중국의 (한반도) '미사일방어'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고, 명확하다.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함.
- 화 대변인은 또 "유관국가(한국, 미국)가 만약 '지역 미사일방어(시스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조치를 추진한다면 반도 상황을 자극해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고 이는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함.

■ 中 환구시보, 한미 사드배치는 전략적 단견 비판(2/8,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이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공식 착수한 데 대해 "전략적 단견"이라고 비판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8일 사설에서 전날 한국 국방부의 사드 배치 논의에 관한 발표를 소개한 뒤 "한국의 결정은 동북아 안보정세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비판함.
- 신문은 "군사전문가 대다수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중국 미사일 동향의 감시능력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중국의 안전(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함. 그러면서 북한만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한국의 설명에 대해 "무기력하다."고 비판했음.

■ 윤병세 장관, 中 경제보복 경고,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어(2/8,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일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할 경우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 외에는 (경제보복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듣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음.
- 윤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게 압박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 대해 우리가 하는 노력은 과거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 높은 설득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中전문가, 사드로 한미일 동맹의 '미니 나토'화 우려(2/11, 연합뉴스)

- 중국군 총참모부 상교(대령)를 지낸 웨강(岳剛) 군사전문가는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사드 배치가 점차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음.
- 그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다음에는 일본에도 연결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은 '미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군사동맹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내 사드 배치 여부가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이 얼마나 가속화될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중국으로선 이런 군사적 대치 구도가 단순한 미사일방어(MD) 시스템보다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 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만일 분쟁이 시작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선적으로 사드를 탄도미사일이나 핵미사일로 파괴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런 치명적인 안보위협을 자국에 들여온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윤병세 장관, 대북제재 끝장 결의 거듭 강조 vs 왕이, 신중 대처(2/12,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1일 오후(현지시간) 뮌헨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와 관련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음.
- 윤 장관은 이 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를 강조한 반면 왕이 부장은 "신중 대응"에 방점을 찍어 여전한 견해 차이를 확인했음.

- 왕 부장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곧 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매우 복잡해졌다면서 안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 中외교부장,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이익 훼손…엄중 우려(2/12,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데 대해 중국의 고위 외교당국자가 "(이는) 분명히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음.
- 중국 외교부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오후(현지시간) 뮌헨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번 조치는 각방(각국)이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며, 또한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임.
- 왕 부장의 이 같은 강경한 어조는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행보에 대해 중국정부가 앞으로 적극적인 '반격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돼 주목됨.

다. 한 · 일 관계

■ 독도 해양조사도 일본 허가 받으라고?…日 'EEZ 법안' 만든다(2/4, 연합뉴스)

- 일본 여권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인이 해양조사를 하거나 인공섬을 만들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장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짐.
- 이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진출에 속도를 내는데 대한 견제 차원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도 독도 주변 해역의 EEZ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일본 여권의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한일, 중일 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됨.

■ 日외무성 10억엔, 위안부 피해자 보상용 아니다(2/5, 연합뉴스)

-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내놓을 돈 10억 엔(약 102억 원)이 개인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표명했다고 5일 전함.
- 양징자(梁澄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한국·일본 양국 관계자와 외무성을 방문했을 때 "10억 엔 속에 개인 보상, 개인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실무자가 "들어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대답했다."고 말했음. 양 공동대표는 5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그 돈이 한국 재단에 주는 돈이며 개인 보상은 아니다.'는 분명한 답변이었다며 이렇게 밝힘.
- 일본 정부는 10억 엔에 개인 보상을 위한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인 책임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그간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일 국방장관 北미사일 대응 전화통화…공조 강화(2/7, 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음. 한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오후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음.
- 두 사람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지 이틀 만인 지난달 8일에도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음. 전화통화에서 한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며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안보상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안보리 결의를 명확히 위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탄력받을 듯(2/8, 연합뉴스)

-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군사정보 보전에 관한 규제를 망라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일본과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작년 10월 한일 국방장관회담 때 한 장관이 “우리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 신뢰가 쌓이면서 공감대가 넓어져야 가능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상기하면 진전된 발언으로 볼 수 있음.
-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세 나라 사이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임. 결국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세 나라 사이의 실시간 정보공유 체제 구축을 위해 한일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됨.

■ 아베, 朴대통령과 통화서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 지지(2/9,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首相) 일본 총리는 9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한일 정상은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 하루 빨리 엄격한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나와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한미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는 전함.
-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노력을 (긍정적으로)평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日언론, 대북제재 한일 발맞췄다 평가…중국의 적극 대응 촉구(2/11, 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력한 조치를 택했다고 평가함.
-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에 이어 일본 정부도 독자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양국이 대북 정책에서 보조를 맞춰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음.
-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에서 가장 큰 장애는 중국의 소극적 자세”라며 한국·미국·일본이 결속해 중국이 궤도를 수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사설을 실었음.

■ 日정부, ‘다케시마의 날’에 4년 연속 차관급 파견(2/12,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

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인 사카이 야스유키(酒井庸行)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발표함.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뒤 "영토, 영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며, 앞으로도 계속 국내외에 홍보, 계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함.
- 스가 장관은 "정부로서는 일한관계를 악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해 검토한 결과 종합적인 판단으로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임.

■ 日법무성, 혐한시위 동영상 삭제요청…피해자 인권침해(2/14, 연합뉴스)

- 일본 법무성이 최근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활동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 법무성은 혐한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게재된 동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법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은 2009년 11월 도쿄(東京) 고다이라(小平)시 조선대학교 교문 앞에서 재특회 회원들이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아버리자"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임. 법무성의 이번 요청은 권고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은 없지만 니코니코 등을 포함해 복수 사이트에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짐.

라. 한 · 러 관계

■ 러시아, 사드 한국 배치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할 것(2/10, 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힘. 러시아 외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보국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함.

- 외무부는 “미국 글로벌 MD 시스템 요소의 역내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 핵문제를 추가적으로 복잡하게 할 수 있다.”면서 “넓은 지평에서 보자면 이같은 행보(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의 글로벌 MD 시스템이 국제 안보와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외무부는 이어 “미국과 한국이 사태 전개가 초래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합당한 결론을 내리길 기대한다면서” 러시아는 이러한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소개했음.
- 한편,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전날 박노벽 주러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사드 배치 가능성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마. 미·중 관계

■ 中, 美군함 남중국해 항행에 해양패권 추구 비판(2/1,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미군 구축함의 남중국해 일대 항행에 대해 “본질은 미국의 해양패권 추구”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음.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의 행위는 실제로는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해양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다수 구성원과 특히 개발도상국의 결연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루 대변인은 미국의 방식은 국제법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면서 “중국은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중국의 주권·안보 및 해양권익을 훼손하는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무력을 과시해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현재 남중국해가 군사화되고 있는 최대 이유라고 주장함.

■ 中링지화 동생, 美정보기관에 中 핵무기등 최고 기밀 제공(2/4, 연합뉴스)

-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동생인 링완청(令完成)이 미국 정보기관들에 중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최고 국가 기밀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음.
- 미국의소리(VOA) 방송 중문판은 4일 미국 보수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을 인용해 링완청이 미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에 중국 정부의 최고

기밀들을 제공했으며, 기밀 가운데 핵무기 가동 시스템과 그 비밀 번호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됐다고 보도하였음.

- 프리비컨의 에디터 빌 거츠는 3일 이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정보기관 내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미국 정보기관들은 작년 가을부터 링완청을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면서 중국 국가기밀을 입수했다고 주장함.

■ 中, 미국의 일방적 대북 제재 반대(2/5,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미국 의회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 국가의) 일방적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하나의 원칙으로서,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관계 및 국제문제에서 (한 국가의) 일방적인 제재를 반대해왔다."고 말했음.
-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응하는 문제는 "다 알다시피 관련 구성원들이 유엔 안보리 틀 속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각국이 함께 앞을 보고 나아가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美국무부,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젊은이…중국이 행동 바꿔야(2/5, 연합뉴스)

-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매우 예측 불가능한 젊은이(unpredictable young man)"라고 지칭하고 "중국이 (김 위원장의) 행동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힘.
- 커비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력한 지도국이자 북한과 접경하는 국가로서 중국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제재조치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기존 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이 보다 확실히 이행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음.

■ 미·중 정상, 북한 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2/6,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5일(현지시간) 발표함.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5일(현지시간) 긴급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예고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전했음.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정상 차원의 협의를 갖지 않았으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고 실제 강행 수순에 돌입하자 긴급 조율에 착수한 것임.
-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실험"이라고 규정하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고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라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백악관이 밝힘.

■ 백악관, 사드 추진, 순전히 北 위협 때문…中에 압박 촉구(2/9, 연합뉴스)

- 어니스트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결과, 미국은 한국 등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와 기술을 배치하는 것에 관해 한국과 공식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힘.
- 또 어니스트 대변인은 "사드 장비와 기술의 배치는 순전히 북한에 의한 위협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조약동맹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의무들을 매우 진지하게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미국은 중국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동의를 넘어 더 강력한 압력을 북한에 넣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함.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며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 미국, 아세안과 '대북제재·남중국해' 논의…중국 압박 세몰이(2/11, 연합뉴스)

-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5~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힘.
-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갈등 확산 방지에 대한 기본 원칙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중국과 논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함.
- 그러나 양국이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현격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해 강력한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됨.

■ 케리, 중국, 北에 영향력 행사해야…왕이, 사드 배치 반대(2/14, 연합뉴스)

- 독일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최근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함.
- 이에 왕이 부장은 대해 제재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한미 간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 논의에 대해 중국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 케리 장관은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왕 부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에 주목하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짐.

■ 미의회, 류샤오보 광장 추진…中기관지, 홍위병이 하던 짓(2/14, 연합뉴스)

- 미국 상원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 도로를 '류샤오보(劉曉波) 광장'으로 개명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 중국 기관지가 "도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함.
-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투옥된 경험이 있는 류샤오보는 민주개혁을 요구하다 2009년 정권전복 기도죄로 기소돼 1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20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일 사설에서 류샤오보는 "한 명의 범죄자일 뿐"이라며 미국이 정말로 중국대사관 앞 도로 명칭을 '류샤오보 광장'으로 바꾼다면 "중국을 화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이어 "문화대혁명 시절 베이징(北京)의 홍위병들도 (소련의 수정주의에 반대하며) 소련 대사관 앞 도로를 '반수로(反修路)'로 개명한 적이 있다."며 미 의회의 이번 조치를 홍위병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깎아내림.

■ 中, 北문제 중국에 미루지 마라 vs 美, 중국 성과 못내(2/14, 연합뉴스)

-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은 13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패널토론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지만 미국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미국을 겨냥함.

- 푸잉 주임은 이날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케빈 러드 전 호주총리, 응 엥 헨 싱가포르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중국과 국제질서'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음.
- 이어 중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온힘을 다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지만 미국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바. 미 · 일 관계

■ 미일, 北미사일대비 한반도 주변에 이지스함 집중배치(2/4,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한반도 주변에 이지스함을 집중 배치함.
- 이지스함은 고성능 레이더로 탄도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한편 탄도 미사일이 영토 안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요격 미사일 'SM3'을 발사할 수 있음.
- 4일 NHK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7함대는 복수의 이지스함을 배치해 북한 탄도 미사일을 추적·감시하고 확보한 정보를 요격부대에 보낼 태세를 정비하고 있음. 미 해군 7함대는 이지스함 배치 해역과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 서해와 제주도 남서 해역을 거쳐 필리핀 루손섬 앞 태평양에 떨어지는 북한 미사일의 예상 궤적을 감안해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 4척 정도를 배치했을 것으로 추정됨.

■ 미일정상 대북대응 전화협의…오바마, 동맹국 방어 용의(2/9,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상이 9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를 신속하게 채택하는 데 노력하기로 함. NHK에 의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9일 전화 회담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같이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짐.
-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모두 도발적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게 결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이에 아베 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과 미국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이러한 위험한 도발 행위에는 어떻게든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 美태평양사령관 내주 방일…북핵·미사일 대응 논의할 듯(2/12,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해군대장)이 오는 16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지지통신이 12일 전함.
- 이는 오는 17일 열리는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한국 합참격) 발족 1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한 것이지만, 이번 방문은 북한이 핵실험 및 에 이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음.
- 이와 관련, 해리스 사령관은 방일 기간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등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국의 동·남중국해 진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지지통신은 덧붙임.

사. 미 · 러 관계

■ 방러 키신저, 미-러 새로운 전략적 관계 정립해야(2/5, 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헨리 키신저 전(前) 미국 국무장관(92)이 미-러 양국이 논쟁적 사안들을 조정하는 틀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관계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현실 외교계의 거인으로 불리는 키신저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안보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러시아 방문 결과를 정리해 올린 글에서 "지금의 미-러 관계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나쁘다. 양측의 신뢰는 사라졌고 대결이 협력을 대신했다."며 이같이 호소함.
- 그는 "많은 전문가가 미-러 양국이 신(新)냉전에 돌입했다고 지적한다."면서 "양국의 장기적 이해는 지금의 혼란과 가변성이 다극적 체제와 글로벌화에 기초한 새로운 균형으로 변모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함.

■ 러, 미·중·일과 북한 로켓 발사 대응 방안 논의(2/9, 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에 뒤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국들의 대응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러시아도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차례로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짐.
-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8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 전화통화가 이루어짐.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통화에서 양측이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조성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를 또다시 위반한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전함.

- 모르굴로프 차관은 이에 앞서 이날 리후이(李輝) 주러 중국 대사와 면담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국의 유사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전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간 전화 통화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무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美국가정보국장, 미·러, 새로운 냉전 휘말릴 수도(2/10, 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新) 냉전 가능성을 공개로 제기하였음.
- 클래퍼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가 근본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해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또한, "러시아는 (나토가 구축하는) 유럽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가 서방을 겨냥한 자국의 핵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자국이 억제, 봉쇄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러시아가 지금 자행하는 많은 공격적 일들은, 그 이유가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미국과 동등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든 자칫 우리를 또 다른 냉전의 소용돌이로 빨려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함.

■ 시리아 해법 놓고 러 "3월1일 휴전" vs 미 "당장 휴전"(2/11, 연합뉴스)

-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료는 1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적시리아지원그룹(ISSG)' 회의를 앞두고 러시아로부터 다음 달 1일부터 시리아 내전에서 무기를 내려놓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17개국이 참여하는 ISSG는 이번 회의에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평화회담에 앞서 사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3주의 시간을 벌어 그 사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 세력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라며 제안을 거부하였음. 대신 미국은 즉각 휴전을 발효하고 정부군 등의 포위로 고립된 시리아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의 접근을 완전히 허용할 것을 역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짐.

■ 러시아, 미·아랍 지상군 투입 시 시리아전 영구화 경고(2/12, 연합뉴스)

- 미국이나 아랍 국가가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5년째 진행돼온 시리아 내전이 오히려 확대되고 영구적 전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가 경고함.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등 아랍권 국가가 시리아에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모든 당사자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 경우 수십 년간 이어지는 영구적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 대통령과 아랍 국가 정상들은 과연 영구적 전쟁을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음.

아. 중 · 일 관계

■ 中 군함, 해경선, 日 영해 주변 항해…일본 경계강화(2/9, 연합뉴스)

- 중국 해경국 선박과 해군 함선 등이 중일 간 경계 주변 해상을 오가는 것이 잇따라 포착돼 일본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였음.
-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일본 영해 바깥쪽에 있는 접속수역(12해리~23해리 구간, 22~44㎞)에 9일 중국 해경국의 선박 3척이 항행하는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이 부근에서 중국 당국의 선박이 확인된 것은 지난달 27일, 지난 4일 등에 이어 이번이 5번째로 전해짐.

■ 북한 잇단 도발에 중일 외교장관 대화 한 달 넘게 단절(2/10, 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여파로 중국·일본 외교 채널의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9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왕이 외교부장과의 전화 회담 예정이 없다고 밝히고서 "우리들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둔다. 중국 측이 바쁘다고 들었다."고 언급함.
- 그는 "정상 간의 전화 회담 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 중·일, 뮌헨안보회의서 역사·영토문제 대립(2/14, 연합뉴스)

-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은 13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안보회의 패널토론에서 일본이 2012년 9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것을 문제 삼았음.
- 푸잉 주임은 일본 정부의 국유화를 언급한 뒤 "2차대전 종료 70년이 지났어도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전했음.
- 이에 대해 기카와다 히토시(黃川田仁志) 일본 외무성 외무정무관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 인공섬 조성을 하고 있는 점을 소재로 반격에 나섰음. 기카와다 정무관은 중국의 인공섬 조성은 남중국해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자. 중 · 러 관계

■ 주중 러 대사, 푸틴 대통령, 올해 중국 방문 계획(2/3, 연합뉴스)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주중 러시아 대사 안드레이 데니소프는 3일(현지시간) 북경 주재 러시아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소개하면서 연말에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함.
- 데니소프 대사는 "지난해와 그 전해인 2014년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다섯 차례나 회동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몇 차례의 회동이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는 러시아 정상의 별도 중국 방문 외에 올해 9월 중국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행사에서도 두 나라 지도자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러시아-중국, 북한 추가적 긴장 고조 행위 용납 못 해(2/7, 연합뉴스)

-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음.
-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모스크바에서 회동해 최근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6일(현지시간) 밝힘.

-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언론보도문에서 "전날 모스크바의 외무부 청사에서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우다웨이 특별대표 간의 협의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계획 등과 관련한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양측 모두 북한이 국제법의 보편적 규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요구 사항들을 보란 듯이 무시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하였음.

■ 왕이 中외교부장-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뮌헨서 회동(2/10,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이 오는 11~13일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별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임.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부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핵 6자 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 등에 있어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장관의 회동 결과가 주목됨.

■ 중러, 한반도 주변서 잇단 군사훈련…'사드배치' 압박행보(2/11, 연합뉴스)

- 중국, 러시아가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잇달아 군사훈련을 전개하며 한국과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동부군구 공보처는 전날 "동부군구 소속군인 2천여 명이 10일부터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있는 사격장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음.
- 신화통신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명령으로 "러시아 남부군구가 지난 8일부터 전시 대비 태세에 돌입하고 돌격(준비태세) 검열을 받았다."고 덧붙임.

차. 일 · 러 관계

■ 아베, 4월말 5월초 연휴에 러시아 방문…푸틴과 회담(2/6,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월 말~5월 초 일본 연휴인 이른바 '골든 위크' 때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보도함.
- 산케이(産經)신문은 러시아 방문 시점이 5월 초이며 아베 총리의 행선지가 러시아 남부 도시인 소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일본은 5월 하순에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최근 관계가 악화한 러시아와 G7의 중개자 역할을 자임해 존재감을 부각할 구상인 것으로 보임.

■ 러일 외무차관급 내주 회동…北핵·미사일문제 논의(2/11, 연합뉴스)

- 일본과 러시아가 16일 도쿄(東京)에서 외무차관급 회의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NHK가 11일 전함.
- 회의에는 북핵 6자회담 일본 수석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참석할 예정임.
- 회의에서 일본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공식 조정이 계속되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에 러시아 측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임. 또 지난 10일 일본 정부가 결정한 인적 왕래 제한 등을 담은 대북 독자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전해짐.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국경지역 주민통제 강화(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사법당국이 국경연선 주민들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뚜렷한 목적 없이 국경연선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주민들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핵실험 이후부터 시작된 '특별경비주간'이 아직도 해지되지 않고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이 지나야 '특별경비'가 풀릴 것 같다"고 언급했음.
- 핵실험 직후 북한은 국경연선 지역과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특별경비주간'을 선포했는데 이와 관련 각 인민반들에서는 "있을 수 있는 반혁명분자들의 준동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는 선전을 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음.
- 특히 주민거주 지역으로 통하는 길목과 열차검열을 강화해 특별한 원인이 없는 이상 외부인들이 국경연선 지역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함.
- 한편 2월 4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국경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중앙에서 위성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전기도 제대로 오지 않는데다 신문도 며칠이 지나야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음.
- 갑작스럽게 국경지역 통제가 강화된 배경을 놓고 주민들 속에서는 "혹시 중앙에서 큰 인물이 뛴(탈북)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간혹 중요한 비밀을 가진 고위급 인물이 도주했을 때 지금처럼 국경통제가 강화된다"고 그는 말했음.
- 소식통은 이어서 "해마다 겨울철이면 국경지역 통제가 강화됐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지금의 주민단속도 연례적인 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며 새해 들어 강력사건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음.

■ 북, 국제제재 여파 우려 시장통제 완화(2/1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긴장 국면에서도 시장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음.
- 평안북도 국경지방의 한 주민 소식통은 "수소탄 시험과 인공위성 발사로 국내 정세가 긴장됐지만, 장마당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2월 11일 밝혔음.

- 그는 “광명성 위성발사를 경축하는 군중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면서 주민들을 이에 동원시킨 것 외에는 별다른 행사가 없다”면서 “시장관리소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장마당을 운영하도록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전했음.
- 때문에 상인들은 시장으로 출근하고 있고, 8.3 생산(가내부업생산)에 동원된 일반 주민들도 생계를 위해 각자 볼 일을 보러 다니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음.
- 이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를 감안해 주민통제의 고삐를 죄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국제제재의 영향으로 생필품과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 주민 동요가 일어날 것을 고려해 주민 생계 현장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지적임.
- 소식통은 “지난해 황해도 지방에 벼농사가 잘 되지 않아 평양도 식량 사정이 어려운 데, 장마당까지 단속하면 일반 사람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음.
- 지난해 봄 왕가뭄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 총생산량이 그 전년에 비해 60만톤, 즉 14%가 줄어든 것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최근 공개한 ‘북한 식량전망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음.
- 한편, 함북도 나선지방에서 연락이 된 다른 주민은 “현재 나선 지방과 국경연선 도시에서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전부 위안화나 달러를 사용하지, 조선돈(북한돈)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음.
- 그는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전쟁위기가 조성됐을 때는 저마다 외화를 바꾸어두려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그런 현상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했음.
-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인원들을 추방하는 강경조치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내부 주민 통제를 어떻게 실시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그는 전했음.

■ 북, ‘위성’ 자랑에도 탈북 계속(2/11, 자유아시아방송)

-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결속에 힘을 쏟고 있지만 주민들의 탈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임.
- 최근 국경연선 도시들은 가족동반 탈북이 늘어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김정은의 생일인 지난 1월 8일 저녁 5시부터 회령시 운동장에서 핵실험을 경축하는 무도회가 열렸다”며 “이런 어수선 한 틈을 타 강안동에 살던 세 가족 11명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2월 8일 밝혔음.

-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 함경북도 당국은 각 시, 군 별로 종합경기장과 학교운동장들에서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군민무도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참가시키기 위해 국경경비대원들을 많이 끌어내 국경경비가 소홀했다고 그는 설명했음.
-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국경경비대 소식통은 "아무리 경비가 삼엄하다고 해도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간다"며 "1월 초부터 지금까지 도 소재지인 혜산시에서만 39세대의 가족이 사라졌다"고 언급했음.
- 양강도 당국은 가족들이 통째로 사라진 것으로 미루어 이들이 중국으로 탈북했을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그는 덧붙였음.
- 탈북가족들이 늘면서 양강도 주둔 국경경비대 25여단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그는 강조했음.
-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소식통은 "혜산시에서만 39세대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국경을 끼고 있는 양강도의 다른 군소재지와 농촌들까지 다 조사할 경우 탈북자들의 수는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음.

■ 양강도서 동계훈련 중 포사격 오발로 지휘군관 16名 사망(2/14, 데일리NK)

- 양강도 삼수군에서 동계훈련 중 기계 정비 부실로 훈련에 참가한 수십 명의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음.
-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달 27일 삼수군에서 진행된 동계훈련 포사격 훈련 중 오발사고가 발생해 지휘군관 16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중상을 입었다"면서 "부상당한 군인들은 현재 양강도 인민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전했음.
- 이어 소식통은 "혹한에 별다른 휴식 없이 훈련을 강행했고, 끝임 없는 훈련에 지쳐 포탄이나 포 상태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덧붙이면서 인명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성과 달성에만 관심이 있는 북한 당국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음.
- 또한 소식통은 혜산 인민병원에 입원해 있는 군인들 모두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복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음.
- 소식통은 "이들은 모두 제대명령을 받아 바로 사회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당국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생각만 해도 막막하기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2. 북한인권

■ 한인 인권변호사 "중국의 국적 없는 북한 어린이에게 관심을"(2/5, 연합뉴스)

-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무국적 어린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자는 주장이 나왔음.
- 미국의 인권변호사이자 북한인권운동가인 실비아 김은 2월 4일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 동북부 지방에 국적도 없이 살아가는 어린이를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북한과 국경이 닿아 있는 중국 북동부 지역에는 2만~3만 명의 국적 없는 어린이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들 중 상당수는 인신매매 또는 결혼이라는 미끼에 속아 중국으로 온 북한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났음.
- 실비아 김 변호사는 "중국 북동부지역에는 여성이 부족해 북한 여성이 중국인에게 팔려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 여성이 중국인과 결혼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음.
- 이어 "중국은 이들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무국적 어린이들은 교육, 의료혜택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김 변호사는 유엔난민기구가 10년 내에 무국적자를 근절하기로 하고 최근 글로벌 캠페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나 중국에 사는 무국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음.
-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 여성이 낳은 무국적 어린이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중국이 무국적 어린이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UN, 북 인권결의안 역대 최소 기권 '어떤 나라가 반대하나'(2/8, 데일리안)

-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최초로 채택된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지난해 12월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되면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려졌음.

-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고무적인 상황은 북한인권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 실제 지난해 12월 17일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은 48개의 국가만이 기권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는 지난 2005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으로 통과된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숫자임.
- 이같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원인은 지난 2014년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과 최종보고서의 파급력 때문이었다는 평가임.
-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COI 보고서가 나온 후 ICC제소라는 강력한 내용까지 결의안에 들어가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은 더 확대됐다. 그러면서 기권국가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음.
-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무대로 옮겨져 북한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가들은 요지부동인 상황임.
-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고 있는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은 서방국가 중심의 이해관계나 가치가 결의안에 적용되고 있어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권은경 사무국장은 "아프리카나 중동 등의 국가들은 결의안이 서방국가 중심의 이해관계와 가치로 인권문제가 평가되고 있어 자신들의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고 국가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인권문제를 다룬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 서방국가 위주의 헤게모니에 반대하는 정서 때문에 결의안 찬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음.

■ "북 인권개선 위해 '조직지도부' 제재"(2/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로버트 콜린스(Robert Collins) 선임 고문은 2월 9일 북한 주민들의 대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은 철저한 '우선순위 설정(Prioritization)' 과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했음.

- 이날 워싱턴 DC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평양 공화국(Pyongyang Republic)' 보고서 발표 행사에 저자로 참석한 콜린스 고문은 북한의 제한된 자원과 이권은 철저히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돼 배분된다고 설명했음.
- 이렇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협조 수준에 따라 이권이 배분되다 보니 북한 주민들은 식량이나 주거, 의료 혜택 접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임.
- 콜린스 고문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관이 노동당 조직지도부(OGD)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인권부정 정책(human rights denial policy), 즉 인권유린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지도부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콜린스 고문은 1천300명 정도로 이뤄진 당 조직지도부가 북한의 관리와 기관에 행동 지침을 내리고 이를 감시하는 핵심 권력부서라고 강조했음.
- 그러면서 유엔이나 6자회담 등에 파견된 북한 관리들은 실제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음.

■ 與 "안보불안 심각"…北인권법·테러방지법 통과 압박(2/9, 연합뉴스)

- 새누리당은 2월 9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앞선 제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경계 지수가 높아지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음.
- 4·13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으로서 차별화된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화 재개라는 거의 정형화된 패턴을 깨고 변화를 주겠다는 시도로 풀이됨.
- 설 연휴 기간인 10일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주도적으로 소집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임.
-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인권법은 10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가 지난해 연말 여야가 처리에 합의하고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인권법이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한 핵심적 이유가 북한 지도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이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음.

-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연휴 기간이지만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 때문”이라면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당에서는 대부분의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음.
-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현안보고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면서 “세습 폭력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음.

■ 美 인권단체들, 北 주민들에 보낼 USB 기부 캠페인(2/11, 연합뉴스)

- 미국 인권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기부 받는 캠페인을 지난주 시작했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2월 10일 소개했음.
-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한해 약 1만개의 USB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면서 이들 USB에는 할리우드 영화들과 한국 TV 쇼프로그램들, 위키피디아 한국어 버전 같은 콘텐츠들이 담겼다고 BBC는 전했음.
- 이들 단체는 USB를 북한에 몰래 들여보내려고 때론 북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한국 당국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한다고 방송은 전했음.
-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재단(HRF)과 포럼 280이 기부 캠페인을 통해 USB를 모아 서울에 있는 탈북자들이 만든 북한전략센터(NKSC)에 전달하면 NKSC가 이를 북한에 들여보냄.
- HRF 전략책임자인 알렉스 글래드스타인은 “음식과 식수 이후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지식”이라며 “우리는 교육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쓸모없는 플래시 메모리들이 (콘텐츠를 담아 북한에 들여보내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대한변협,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2/11, 이데일리)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월 11일 성명을 내고 “여야는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여전히 통과를 미루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음.
- 대한변협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남북 간 대화·협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논리이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이러한 논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자명해졌다”고 주장했음.

- 이어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이야말로 북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시민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음.

■ 빅터 차 “북한과 대화창구 열어둬야…창구 닫히면 위험”(2/14, 연합뉴스)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 한국석좌는 2월 13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것을 우려하며 북한과의 대화창구는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기도 한 빅터 차는 이날 미국 뉴저지 주 프린스턴대에서 열린 ‘북한인권 콘퍼런스’에서 기조 발언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창구가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
- 그는 지난 2월 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제재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고 있다고 진단했음.
- 이어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 창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라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북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음.
-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시기에는 북한의 도발이 적었던 반면 대화가 막히면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던 과거 사례도 거론했음.
- 특히 그는 미사일 발사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힘이 더 실린 것을 고려하면 천안함 사건과 같은 도발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음.

3. 탈북자

■ 북한 교화소 출신 탈북자 300명 증언 담긴 책 발간(2/2, 미국의소리)

-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이 같은 교화소 생활을 경험한 탈북자 296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7권으로 구성된 ‘북한 구금시설 총서-교화소’를 발간했음.
- 북한 평안남도 개천 1호 교화소와 평양시 강동 4호 교화소, 함경남도 함흥 9호 교화소, 평안남도 증산 11호 교화소, 함경북도 전거리 12호 교화소, 함경남도

오로 22호 교화소 등 6 곳의 교화소에서 벌어지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담았음.

-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인성 사무국장은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교화소 같은 일반 구금시설에서도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음.
- 먼저 책에는 북한 구금시설의 정의와 종류, 교화소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이 담겼으며 인권 유린 실태 등 탈북자들의 구술 내용과 증언이 수록됐음.
- 아울러 교화소의 위치와 구금시설의 규모, 의식주 현황과 생활실태는 물론 구금자에 대한 관리-감시 체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한 비공개 처형, 강제 낙태, 영아 살해, 강제노동 등 다양한 인권 침해들이 각 교화소별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소개하고 있음.
- 북한인권정보센터 측은 현재 북한에 최소 23곳의 교화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 탈북난민, 미 193명 캐나다 465명(2/4, 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가 4일 발표한 최신 난민입국통계(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Office of Admissions)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한 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했음.
- 지난해 10월 시작된 미국 정부의 2016년 회계연도를 보면 지난해 11월에 5명, 12월과 지난달에 각각 1명씩 총 7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받았음.
-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를 처음 수용한 2006 회계연도에 9명, 이듬해 22명, 2008년에 37명 등을 포함해 지난달 말까지 총 193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한 것임.
- 한편, 캐나다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465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였음.
- 캐나다 이민 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86건을 심사해 단 두 명만 난민으로 수용했음.
- 2014년에는 무려 642건을 심사해 한 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부여한 데 이어 2년 연속 한 자리 수의 탈북난민의 캐나다 정착을 허용한 것임.

- 2012년 230여 명, 2011년 120여 명에 달하던 캐나다의 탈북 난민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2012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돼 한국에 이미 정착한 후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에 대한 색출이 강화됐기 때문임.

■ 타임 잡지 '영국 정착 탈북자들, 정신적 외상 고통'(2/13, 미국의소리)

-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2월 11일, 영국 런던의 탈북자 사회를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음.
- 지난 12년 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런던에 도착해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탈북자가 약 650명에 달하며, 난민 지위를 얻는 데 실패한 탈북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1천 명에 가깝다는 것임.
- 잡지는 이들 가운데 영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자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과거의 힘든 경험에서 비롯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음.
- 다시 북한 당국에 붙잡힐 수 있다는 우려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탈북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것임.
- 또한 많은 탈북자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민 당국자들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없고, 일자리도 식당종업원이나 식료품가게 보조 등 허드렛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영국으로 왔다며, 하지만 영국 정부가 지문을 채취해 한국 정부의 조회를 거치는 등 심사를 강화하면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음.

4. 이산가족

■ '상봉신청' 이산가족 50%, 뜻 못 이루고 사망(2/8, 연합뉴스)

-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남측 가족의 절반가량이 헤어진 북측 가족을 그리워하다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나타났음.
- 2월 8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북측 가족과의 상봉을 신청한 전체 남측 가족 13만 808명 가운데 49.8%인 6만 5천134명이 고령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음.

- 생존 이산가족은 50.2%인 6만 5천674명이며, 이들 중 90세 이상 9천61명(13.8%), 80~89세 2만 8천381명(43.2%), 70~79세 1만 6천807명(25.6%) 등 70세 이상이 5만 4천249명(82.6%)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가 심함.
-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때문에 상봉 신청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2011년 38.7%, 2012년 41.9%, 2013년 44.7%, 2014년 47.3%, 지난해 49.8%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이처럼 이산가족 고령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생전에 많은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상봉 정례화 등의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임.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국군포로 귀환자, 2011년 이후 전무(2/9, 연합뉴스)

- 국군포로 귀환자가 2011년 이후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 2월 8일 탈북자지원단체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4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국군포로 귀환자 수가 2005년 11명, 2006년 7명, 2007년 4명으로 줄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6명, 2009년 3명, 2010년 1명을 각각 기록했음.
- 북한을 성공적으로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가운데 현재 41명이 사망했고 39명은 생존해 있음.
- 2010년 마지막으로 귀환신고를 한 김영기(90세, 국군 3사단 출신) 씨는 포로생활 후유증과 각종 질환 등으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음.
- 국군포로 송환운동을 벌이는 민간단체 관계자는 “국군포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북 중간 국경 경비가 삼엄해지고 있어 국군포로 자력으로 탈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군포로 귀환자가 사실상 끊겼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분석했음.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고령화를 감안하면 국군포로가 살아있을 확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 국군포로 생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음.

- 정부는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국군포로가 5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

7. 대북지원

■ 유엔 식량농업기구, 엘니뇨 대응…북한에44만 달러 지원(2/3, 미국의소리)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엘니뇨 현상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가뭄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음.
-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2015-2016 엘니뇨, 농업, 식량 안보, 영양에 대한 조기 대응과 반응'(2015-2016 El Nino, Early action and response for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nutrition) 보고서에서 북한을 엘니뇨로 식량안보가 위협 받을 수 있는 37개 나라에 포함했음.
- 이에 따라 미화 44만 달러를 긴급 투입해 황해남북도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면서 가뭄으로 인한 곡물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북한에서 자연재해에 좀 더 유연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혔음.
- 앞서 식량농업기구는 가뭄이나 폭우 등 기상변화를 불러오는 엘니뇨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을 상대적으로 기상급변에 대비가 부족한 지역으로 지정했음.
-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가뭄으로 북한의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2% 감소한 230만t, 옥수수는 15% 감소한 220만t에 그쳤다고 밝혔음.
- 특히 쌀 230만t은 도정 전 기준으로, 도정 후로 환산하면 150만t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음.

■ 미 NGO, 북한에 160만 달러 상당 의약품 지원…2월 도착(2/3, 미국의소리)

-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AmeriCares)가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용품 8t을 지원했음.
-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지난 12월 미화 160만 달러 상당의 지원물품을 북한에 보냈다며, 이 달 중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포스트너 대변인에 따르면 지원물품은 항생제와 심혈관 관련 의약품, 임산부용 비타민제, 겨울용 모자와 장갑 등으로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전달될 예정임.

- 아메리케어스는 보통 매년 네 차례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의 경우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만 달러와 16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음.

■ WFP, 1월 북 주민 56만 명에 식량지원(2/9,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북한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 등 약 56만 명에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2월 9일 밝혔음.
- 북한주민에 전달된 식량은 약1천362톤으로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의 2천343톤보다 약 980톤 줄었음.
- 세계식량계획은 겨울방학이어서 학교 급식 때 지급되던 영양비스킷 등의 지원식품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6월 말까지 매달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약 180만 명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모금 부진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음.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를 토대로 올해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할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 정부, 5년째 대북지원예산 '0'(2/1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정부가 올해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 국무부가 2월 9일 의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국제개발처 예산안의 해외지원 계획에 북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예산 중149억 달러가 해외 원조와 지원으로 편성했지만 북한과 관련한 지원 계획은 없었음.
-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올해 초 대북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없다'고 답한 바 있음.
- 미국 정부 차원의 마지막 대북지원은 홍수와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했던 2011년임.
- 이마저도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미국의 구호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 형식이었음.

- 국제개발처의 대변인은 비정부 민간 구호단체를 통해 영양과 의료지원, 재난복구, 재해 대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 5개 분야를 지원한 후 북한과 관련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음.
- 국제개발처는 2011년 이후 대북지원 중단과 관련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에서 진행 중인 '재난 위험감소사업(Disaster Risk Reduction /DRR)'도 없다고 설명했음.
- 미국 의회가 지난해 채택한 농업법에 포함된 '대북식량지원금지' 조항도 미국 정부 예산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미 구호단체, 북한에 영양쌀 28만5천 끼 지원(2/11, 미국의소리)

-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본부를 둔 국제 구호단체 '스톱 헝거 나우 (Stop Hunger Now)'는 2월 10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 28만5천 명 분의 영양쌀을 지원했다고 밝혔음.
- '스톱 헝거 나우'의 줄리 사베인 영양지원 담당관은 지난 1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흰쌀과 콩,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가 첨가된 영양쌀을 선적했다고 말했음.
- 사베인 담당관에 따르면 영양쌀은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하고 있는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환자들에게 제공됨.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 블랙 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 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유럽 NGO, 대북 기후변화대응 지원(2/11, 자유아시아방송)

-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7개 국제 구호단체의 연합체인 '2015 계획연합'은 11일 공개한 자료에서 독일의 세계기아원조와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가 이상 기후 현상인 엘니뇨로 인한 북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독일의 세계기아원조는 평안북도에서 산간농법을 전수하며 향산 일대의 1천 500가정을 지원하고 있음.
- 향산, 운산, 구장 지역 민둥산에 나무를 심거나 개간하는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3년째 진행 중임.
- 태양열로 물을 퍼 올리는 양수시설과 중력을 이용해 식수를 끌어 올리는

양수시설을 설치하고 황해북도 금촌군의 민둥산에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고 있다고 소개됐음.

■ "대북지원, 북 비협조로 인내심 요구"(2/12,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에 위치한 해외 개발 연구소(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는 '북한의 기근'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향후 몇 년간 인도주의적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지원하는 해당 국가 기관이나 비정부기구들에 인내심이 요구된다"고 전했음.
- 즉, 북한의 기근이나 경제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협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이 크다는 설명임.
- 이 보고서의 저자 엠마 캠벨 호주 대학의 방문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주장이 몇몇 지원기관으로부터 나오는 등 해외 원조가 그나마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음.
- 따라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 기관들 중에는 지원 모니터링 (감시)에 대한 접근성이 허용되지 않고, 대북 사업에 대한 후 평가를 못하게 되자 사업을 중단하는 기관들이 생겨나는 반면, 일부 기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 대기근으로부터 이어져온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을 계속 도와야 한다며 지원을 지속했다는 설명임.
- 하지만, 캠벨 연구원은 "(수십년간의 대북 지원을 점검해보면) 전반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 원조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제사회 원조가 북한 내 열악한 지원 협조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음.
- 단지, 그는 북한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면서도 원조를 제공하는 측에 비협조적인 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정부기관들 및 비정부기관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음.

8. 북한동향

■ 우리 국회의 '북인권법' 채택 관련 '가소로운 정치만화'라며 '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드는 것은 저들의 추악한 반인민적 본성을 감추고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에 먹칠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비난(2.6, 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 범죄자들의 단말마적 발악)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